

일 본

권태환(前 주일본 국방무관)

1. 국가현황

1-1. 국가 개요(2022년 기준)

인구	GDP	1인당 GDP	국방예산 (GDP 대비)	예비전력 예산 (국방예산 대비)
1억 2,585명	\$ 5.15조	\$ 40,847	\$ 4,860억 (0.94%)	?

1-2. 일반 현황

- 민족과 언어 : 일본족(Japanese), 일본어(Japanese)
- 구성과 면적 : 4개의 주된 섬과 4,000 여개의 작은 섬
- 면적 : 38만 km²(한반도의 1.7배)
- 인구 : 1억 2천 700만명(2023년 일본 총무성)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교육 : 의무교육 9년(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 의회 : 중의원(465명), 참의원(242명)
- 교역액:
- 외환 보유액 : 1조 2,643억 달러(2017년, 재무성)
- 경제 성장률 : 1.5%(2017년, IMF)
- 자위대 : 24만 7,154명(정원)
- 방위비 :
- 군사력 평가 : 세계 5위(2022년, GFP)
- 행정단위 : 1都(도쿄도), 1道(홋카이도), 2府(오사카부·교토부), 43縣
- 종교 : 신도(神道 : Shintoism), 불교(Buddhism), 기독교(Christianity)
- 독립일 : 1952.4.28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주권 회복, 오키나와 72년)

1-3. 인구증가율 :

2. 국방 환경과 정책

2-1. 국방환경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일본은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 아래 놓이게 되었다. 장차 국제사회의 향방을 결코 낙관할 수는 없다. 일본의 위협 인식을 종합해 보면, 첫째는 인도태평양지역을 둘러싼 미중의 전략적 경쟁의 심화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남중국해, 타이완, 동중국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둘째는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 시진핑 정권의 무력시위의 현저한 증가이다. 여기에는 펠로시 미국 국회의장을 비롯한 바이든 정부의 타이완 정책이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타이완 정부의 독자적 대외정책 추진 등에 의해 시진핑 주석은 무력불사용 배제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이다. 에너지와 식량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으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본격화되자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대만침공 우려와 북한의 대러 전략적 접근이 주목된다. 최근 동중국해는 물론 동해 상에서 이루어지는 중러 함정 및 전투기훈련은 물론 전쟁 물자지원, 나아가 탄약과 장비 제공 여부가 문제시되는 등 북-중-러의 전략적 연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연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전이 미래의 전쟁 양상 나아가 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 등의 비대칭적 공격과 AI, 무인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정보전, 기후변동 등 글로벌 안보환경과 과제가 확산되어 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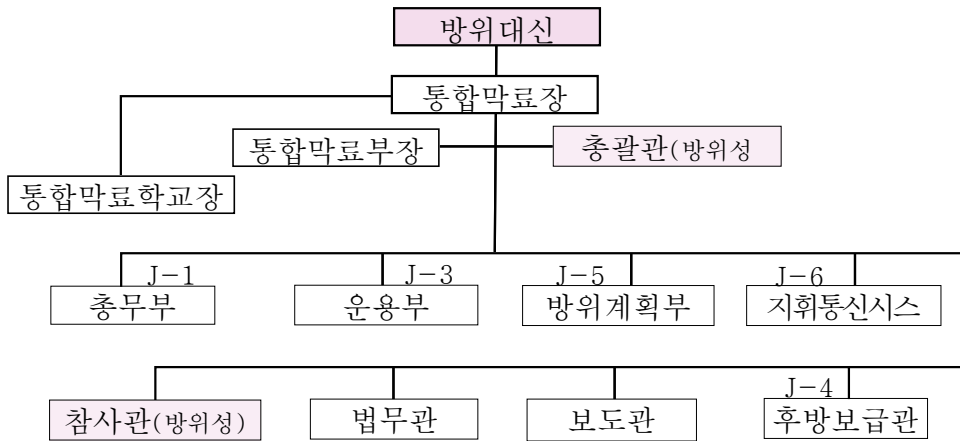
다섯째, 핵전쟁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사용’ 제기와 함께 북한도 ‘선제적 핵 공격에 의한 방어역량 무력화’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핵 보유국인 일본에 있어 미국의 핵확장억제에만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위협인식이 무엇보다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제 국가안보는 더 이상 자국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시대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분산을 위한 북-중-러 연계를 주시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역내 분쟁이 바로 일본의 안보상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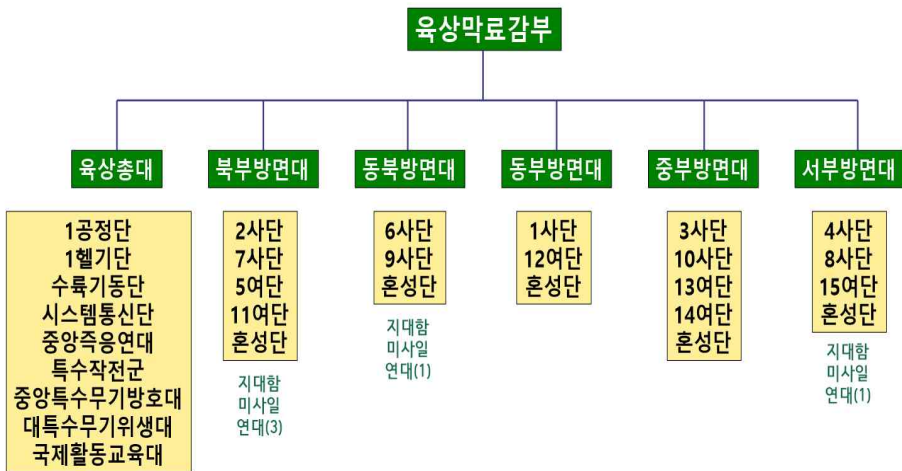
2-2. 국방 정책

일본은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미일 동맹에 안보를 의존하는 국가안보를 추진해 왔으며, 전수방위, 비핵 3원칙 등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미소 냉전이 고조되면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976년 방위계획대강과 1978년 미일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현존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

2-3-2. 통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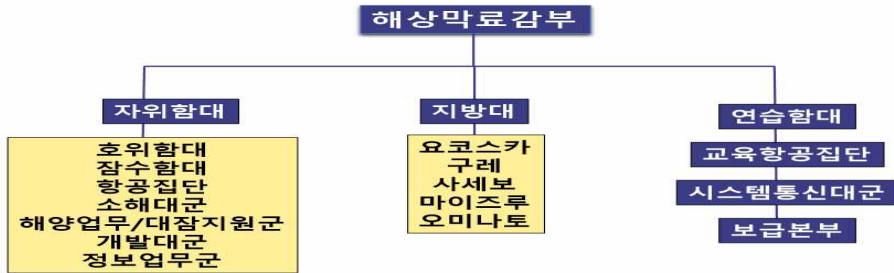


2-3-3. 육상자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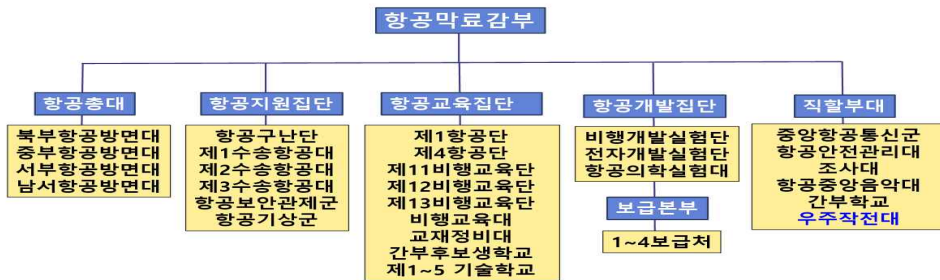


- ※ 작전운동 시에는 방위대신이 통합막료장, 육상총대사령관, 방면총감을 통해 군령권을 행사
- ※ 2018. 4.1 육상총대 창설로 인해 육상자위대 전부대에 대한 일원적 운용이 가능

2-3-4. 해상자위대



2-3-5. 항공자위대



2-4. 군사력 현황

2-4-1. 방위성 및 자위대의 정원 현황¹⁾

(2021. 3. 31일 기준)

	특별지		일반지	
	정원 내	정원 외	정원내	정원외
방위성	방위성 비서관		사무관 등 26명	비상근 직원
방위부대신	자위대 대원			
방위성	방위사무차관	자위관후보생		
정무관(2명)	방위심의관	예비자위관 47,900명		
방위성	서기관 등 751명	즉응예비자위관 7,981명		
보좌관	사무관 등 20,144명	예비자위관보 4,621명		
방위성	자위관 247,154명	방위대학교 학생		
정책참여 (3명 이내)		방위의과대학교 학생		
		육상자위대 고등공과학교 생도		
		비상근 직원		

1) 방위성, 「방위백서 2021」 자료(50) 방위성 및 자위대의 정원 현황 및 추이. (검색일 : 2022년 5월 9일) https://www.mod.go.jp/publication/wp/wp2021/pdf/wp2021_JP_Full_02.pdf

(2021. 3. 31일 시점)

구 분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통합막료감부	합계
정 원	150,695	45,329	46,943	4,187	247,154
현 인원	141,443	43,419	43,830	3,817	232,509
충족률(%)	93.9	95.8	93.4	91.2	94.1

구 분	비임기제 자위관				임기제 자위관
	장교	준위	부사관	병	
정 원	46,205	4,931	140,349	55,669	
현 인원	43,039(2,532)	4,712 (102)	139,809(8,997)	24,197(3,052)	20,752(3,576)
충족률 (%)	93.1	95.6	99.6	80.7	

(注) 1. 현 인원의 ()는 여성 인원수로 전체 수에 포함
2. 정원은 예산 정원

자위대 구성을 보면 장교 및 부사관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전시 기간편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사시 일반 사병들을 단기간 내 인력구조와 부대구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안보환경이 엄중하며 외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전력 확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자위대법 뿐 아니라 국민보호법과 별도의 예비전력 운용을 위한 법 제정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 제안한 5년 이내 GDP 대비 2% 방위비 증가가 현실화된다면 예비전력의 확충도 가시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2-4-2. 육상자위대 주요 장비

무반동포	박격포	아전포	로켓 발사기	고사기관포	전차	장갑차	기동전투차
2,600	1,200	400	50	50	570	990	120

2-4-3. 해상자위대 주요 함정

호위함	잠수함	기뢰함정	초계함정	수송함정	보조함정
47	22	22	6	11	29
268	63	22	1	28	130

2-4-4. 자위대 주요 항공기

소속	형식	기종	용도	보유수	최대속도 (kn)	승무원 (명)	전장 (m)
육상자위대	고정익	LR-2	연락정찰	8	300	2(8)	14
	회전익	AH-1S	대전차	48	120	2	14
		OH-1	관측	37	140	2	12
		UN-1J	다용도	115	110	2(11)	13
		UH-2	다용도	1	130	2(11)	13
		CH-47J/J A	수송	50	150/140	3(55)	16
		UH-60JA	다용도	40	150	2(12)	16
		AH-64D	전투	12	150	2	15
	겸용	V-22	수송	9	280	3(24)	17
해상자위대	고정익	P-1	초계	33	450	11	38
		P-3C	초계	40	400	11	36
		US-2	구난	6	320	11	33
	회전익	SH-60J	초계	12	150	4	15
		SH-60K	초계	75	140	4	16
		MCH-101	소해·수송	10	150	4	20
항공자위대	고정익	F-15J/DJ	전투	200	마하 2.5	1/2	19
		F-2A/B	전투	91	마하 2	1/2	16
		F-35A	전투	27	마하 1.6	1	16
		C-1	수송	7	마하0.76	5(60)	29
		C-2	수송	14	마하0.82	2~5(110)	44
		C-130H	수송	13	320	6(92)	30
		KC-767	공중급유·수송	4	마하 0.84	4~8(200)	49
		KC-130H	공중급유·수송	3	320	6(92)	30
		E-2C	조기경보	10	320	5	18
		E-2D	조기경보	3	350	5	18
		E-767	조기경계관제	4	450	20	49
	회전익	CH-47J	수송	15	160	5(48)	16
		UH-60J	구난	37	140	5	16

2-4-5. 정보위성 : 첩보수집위성 9기, 통신위성 2기 운용

3. 병역 제도

3-1.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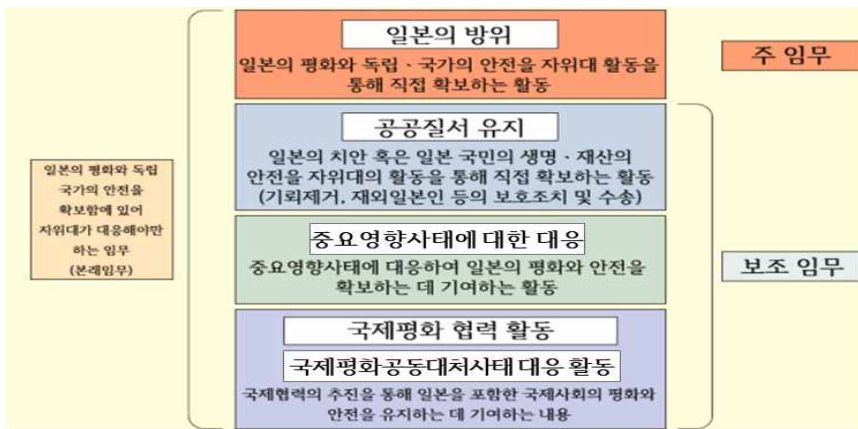
3-1-1. 법적 근거

육상자위대에서는 「자위대법」(1957년 법률 제165호) 등의 규정에 근거해 유사시 필요한 방위력을 급속하고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즉응 예비자위관 및 예비자위관의 제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양자의 신분은 비상근의 특별직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3-1-2. 자위대의 임무

일본의 예비전력에 대한 구상을 위해 먼저 자위대의 기본 임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위대법과 국가안보전략서 등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보면 자위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즉 자위대 임무는 평시에 예비전력을 통해 상호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유사시에는 대체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 자위대의 임무에 관한 개념도



3-2. 자위대 양성과 병무 행정조직

3-2-1. 자위대 모집과 양성

자위관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지원제도(모병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구분을 통하여 채용된다. 아울러 자위관 채용연령과 관련하여 민간기업 근무 경력을 소유하는 인재 등 보

<도표 1> 자위관 계급별 정년 현황

계급	약칭	정년
육장·해장·공장	장(중장)	만60세
육장보·해장보·공장보	장보(소장)	
1등육좌·1등해좌·1등공좌	1좌(대령)	만57세
2등육좌·2등해좌·2등공좌	2좌(중령)	만56세
3등육좌·3등해좌·3등공좌	3좌(소령)	
1등육위·1등해위·1등공위	1위(대위)	만55세
2등육위·2등해위·2등공위	2위(중위)	
3등육위·3등해위·3등공위	3위(소위)	
준육위·준해위·준공위	준위	
육조장·해조장·공조장	조장(원사)	
1등육조·1등해조·1등공조	1조(상사)	
2등육조·2등해조·2등공조	2조(중사)	
3등육조·3등해조·3등공조	3조(하사)	
육사장·해사장·공사장	병장	-
1등육사·1등해사·1등공사	1사(상등병)	
2등육사·2등해사·2등공사	2사(일등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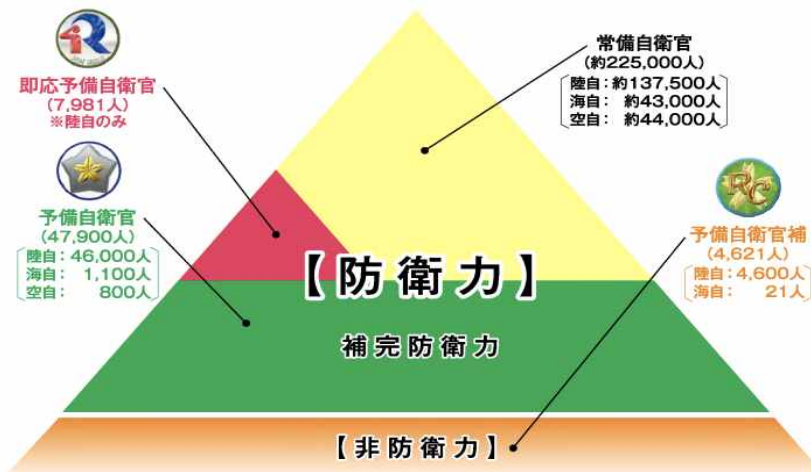
4. 예비자위관 제도

4-1. 지휘 체계 및 부대 관리

4-1-1. 예비자위관 구성

일본 자위대의 예비전력은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상비전력의 일부로 운용될 수 있는 '즉응예비자위관'으로 7,981명이다. 둘째는 유사시 보완적 전력으로서 '예비자위관'이며 총 47,900명이며, 육상자위대 46,000명, 해상자위대 1,100명, 항공자위대 800명이다. 셋째, 유사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는 '예비자위관補'로서 4,621명 규모이다. 육상자위대가 4,600명, 해상자위대는 21명에 불과하다. 육상자위대 즉응예비자위관은 1997년, 예비자위관은 육상자위대 1954년, 해상자위대 1970년, 항공자위대 1986년이며, 예비자위관보는 육상자위대 2002년, 해상자위대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기본자격은 특수직업 국가공무원이다. 타국에 비해 예비전력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반전의를 고려해서 '평화헌법 9조'에 의한 교전권 자체를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이다.

<표 4> 자위대의 예비전력 현황



예비자위관이란 항상 유지하는 상비자위관의 인원을 억제하고 필요한 때만 효과적으로 증원하기 위한 제도 또는 그 임무에 있는 자위대원의 관직 및 그 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분은 비상근의 방위성 직원(비상근의 특별직 국가 공무원)·자위대원이며 방위성 직원의 정월 외로 되어 있다. 관리는 각 지방협력본부가 하고 있으며 예비자위관으로 명명하고 있다. 자위관을 퇴관한 자, 예비자위관보의 교육훈련을 종료한 자로부터 임관시킨다. 예비자

위관보 과정을 수료하고 예비자위관으로 임관한 자를 특히 공모 예비자위관이라고 하며 현역 출신과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 즉응 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보와 합쳐서 예비자위관 등이라고 한다.

<도표 1> 예비자위관 개요

	예비자위관	즉응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보
기본구상	방위소집명령 등을 받아 자위관이 되어 근무	방위력의 기본적인 체제의 일부로서 방위소집명령 등을 받아 자위관이 되어 미리 지정된 육상자위대 부대에서 근무	교육훈련을 수료한 이후에 육상자위대 또는 해상자위대의 예비자위관으로 임용
채용대상	前 자위관, 前 즉응자위관, 前 예비자위관	前 자위관, 前 예비자위관	(일반가능 공통) 자위관 미경험자(자위관 근무 1년 미만인 자를 포함)
채용연령	병: 만 18세 이상 만 55세 미만 간부·준위·부사관: 정년연령에 2년을 더한 연령 미만	병: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 간부·준위·부사관: 정년 연령에서 3년을 뺀 연령 미만	일반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미만, 기능은 만 18세 이상이며 보유한 기능에 따라 만 53세 ~ 55세 미만
채용 등	지원을 받아 선발을 통해 채용 교육 훈련을 수료한 예비자위관보는 예비자위관으로 임용	지원을 받아 선발을 통해 채용	일반: 지원을 받아 시험을 통해 채용 기능: 지원을 받아 선발을 통해 채용
계급의 지정	前 자위관: 퇴직 당시의 지정 계급이 원칙 前 예비자위관보, 前 즉응예비자위관: 퇴직 당시의 지정 계급이 원칙 예비자위관보 · 일반: 2년 기능: 기능자격경험연수에 따라 지정	前 자위관: 퇴직 당시 계급이 원칙 前 예비자위관: 퇴직 당시의 지정 계급이 원칙	계급은 지정하지 않는다.
임용기간	3년 / 1임기	3년 / 1임기	일반: 3년 이내 기능: 2년 이내
(교육) 훈련	지위대 법으로는 20일/년, 다만 5일/월(기준)으로 운용	30일 / 년	일반: 50일 / 3년 이내(자위관후보생 과정에 상당) 기능: 10일 / 2년 이내(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자위관으로서 근무하기 위한 교육)
승진	근무기간(출근일수)를 만족한 자 중에서 근무실적 등을 근거로 선발을 통해 승진	근무시간(출근일수)를 만족한 자 중에서 근무실적 등을 근거로 선발을 통해 승진	지정계급이 없기에 승진하지 않는다.
처우	훈련소집수당: 8,100엔 / 일 예비자위관수당: 4,000엔 / 일	훈련소집수당 10,400 ~ 14,200엔 / 일 즉응예비자위관수당 16,000엔 / 월 근속보장금 120,000엔 / 1임기	교육훈련소집수당: 7,900엔 / 일 방위소집 등 소집에 응할 의무를 지지 않기에 예비자위관수당에 상응하는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기업 보조금	-	고용기업 보조금: 42,500엔 / 월 고용기업 협력 확보 보조금: 34,000엔 / 일	-
소집의무	방위소집, 국민보호 등과 관련한 소집, 재해소집, 훈련소집	방위소집, 국민보호 등과 관련한 소집, 치안소집, 재해 등과 관련한 소집, 훈련소집	교육훈련소집

4-2. 교육훈련

예비전력에 대한 교육훈련은 일반 기업에서의 근무 등 평상시 사회인으로서의 생활과 예비자위관으로서의 직무를 양립하기 위해 예비자위관(연 5일간) 및 즉응 예비자위관(연 30일간)의 훈련소집에는 분할 참가가 허용된다(단 예비자위관보의 교육훈련소집에는 분할 참가는 허용되지 않으며 각 유형별로 연속 5일간의 출두가 필요하다). 예비자위관(5일간)의 경우 3일과 2일(또는 2일 등 3일간)의 양 분할이 허용되며 연속참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으면 훈련 일정 중 참가일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표 6-1> 유형별(5일) 훈련 방안

1日目	2日目	3日目	4日目	5日目
出頭 被服等交付 着隊式 健康診断等	野外衛生 体育訓練 基本教練等	武器訓練 射撃予習 射撃検定	特技に応じた職務訓練	精神教育 防衛講話 制度教育 表彰、離隊式
 ● 出頭	 ● 野外衛生	 ● 射撃予習	 ● 警備訓練	 ● 永年勤続者表彰
 ● 着隊式	 ● 体育訓練	 ● 射撃検定	 ● 救急法	 ● 離隊式

<표 6-1> 유형별(2-4일) 훈련 방안

個人としての訓練(各個訓練)			部隊としての訓練(部隊訓練)		
Aタイプ	Bタイプ	Cタイプ	Dタイプ	Eタイプ	Fタイプ
精神教育 特殊武器防護等 2日間	格闘訓練 小火器射撃 体力検定等 2日間×3回	特技訓練等 2日間×4回	班レベルの 部隊訓練 4日間×1回	小隊レベルの 部隊訓練 3日間×2回	中隊レベルの 部隊訓練 4日間×1回
 ● 訓練開始式	 ● 射撃訓練	 ● 空輸訓練	 ● 対空戦闘訓練	 ● 追撃砲訓練	 ● 積載訓練
 ● 精神教育	 ● 格闘訓練	 ● 砲手訓練	 ● 燃料交付	 ● 小火器戦術射撃	 ● 中隊検閲

향후에도 지진을 비롯한 재해에 대하여 예비자위관 등의 소집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예비자위관 등의 충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임기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예비자위관의 경우 병장 이하의 채용상한연령을 '37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그리고 연임시의 상한연령은 '61세 미만'에서 '62세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의사 자격을 소유한 인재를 대상으로는 상한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의사로서의 기량이 적정히 유지되며, 예비자위관의 임무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 연임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관점에서 사전지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지정대상의 자발적 참여도와 평소 대비역량 등 준비태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4-3. 처우 및 보상

4-3-1. 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은 방위소집명령 등을 받고 자위관이 되어 후방지원, 기지경비 등의 요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예비자위관보는 자위관 미경험자 등에서 채용되어 교육훈련을 수료한 이후에 예비자위관으로 임용된다. 예비자위관 등은 평소에 개개인의 직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업무일정의 조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자위관 등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2017년에는 예비자위관 또는 즉응예비자위관의 고용주가 훈련소집 예정 기간과 실질적인 운용을 위하여 예비자위관 등이 소집되어 자위관이 되기까지의 예정 기간 등의 정보를 요구하였을 경우에, 방위성·자위대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2018년에는 예비자위관 또는 즉응예비자위관이 ① 방위출동, 국민보호 등 파견, 그리고 재해파견 등으로 소집에 응하였을 경우, ② 소집 중에 발생한 공무상 부상 등으로 본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는 그 직무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용기업 협력확보 보조금' 제도를 신설했다. 평시에는 훈련소집에 응하고 연 20일 이내로 소정의 기간 동안 훈련에 종사하며, 예비자위관 수당(월 4000엔)과 훈련에 종사했을 경우의 훈련소집수당(1일당 8100엔)이 지급된다.²⁾

4-3-2. 즉응예비자위관

즉응예비자위관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필요한 예비전력을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운영한다. 평소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방위소집명령 등에 따라 소집된 경우 미리 지정된 부대에서 자위관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즉응 예비자위관은 상시 근무하는 상비자위관과 함께 일선 부대로서의 임무를 맡도록 돼 있어 예비자위관이

2) 일본대백과사전서, <https://kotobank.jp/word/%E4%BA%88%E5%82%B9%E8%87%AA%E8%A1%B%E5%AE%98-146454> 검색일 : 2022년 5월 8일)

주둔지 경비, 후방지원 등의 임무를 맡는 데 비해 보다 높은 숙련도와 적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필요한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해 방위대신이 발령하는 훈련소집명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두하여 훈련소집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1년당 훈련소집 기간은 30일로 되어 있다. 명령은 훈련소집명령서에 의해 발령되도록 되어 있으며 명령서는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지정부대의 장이 즉응 예비자위관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훈련소집 일정에 대해서는 지정부대의 장이 부대 전체의 연도 및 각 기의 훈련계획을 즉응 예비자위관 본인 및 그 고용기업 등에 사전에 통지하고 복수의 훈련일정 중에서 가장 편리한 훈련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조정을 한 후 결정하고 있다. 또 각 도도부현에 설치된 지방협력본부는 즉응 예비자위관 등의 모집활동이나 홍보활동을 담당하고 있어 고용기업의 협조를 얻어 즉응예비자위관이 훈련소집 등에 응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응예비자위관에 대해서는 방위성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1955년 법률 제266호) 등에 의해 방위소집 등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가로 월액 16,000엔의 즉응예비자위관 수당이 분기별로 한꺼번에 지급되게 되어 있다. 다만,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훈련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이미 지급한 만큼의 익월 이후의 몫은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 외에는 실제로 훈련에 종사했을 경우의 대가로 계급에 따라 1일당 10,400엔에서 14,200엔까지의 훈련소집수당이 지급된다.

4-3-3. 예비자위관보

2020년에 신설되었으며, 자위관 경험이 인원이 예비자위관보를 거쳐 예비자위관으로 임용된다.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아 즉응예비자위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 즉응예비자위관이 안심하게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고용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즉응예비자위관 육성협력기업 보조금’제도도 신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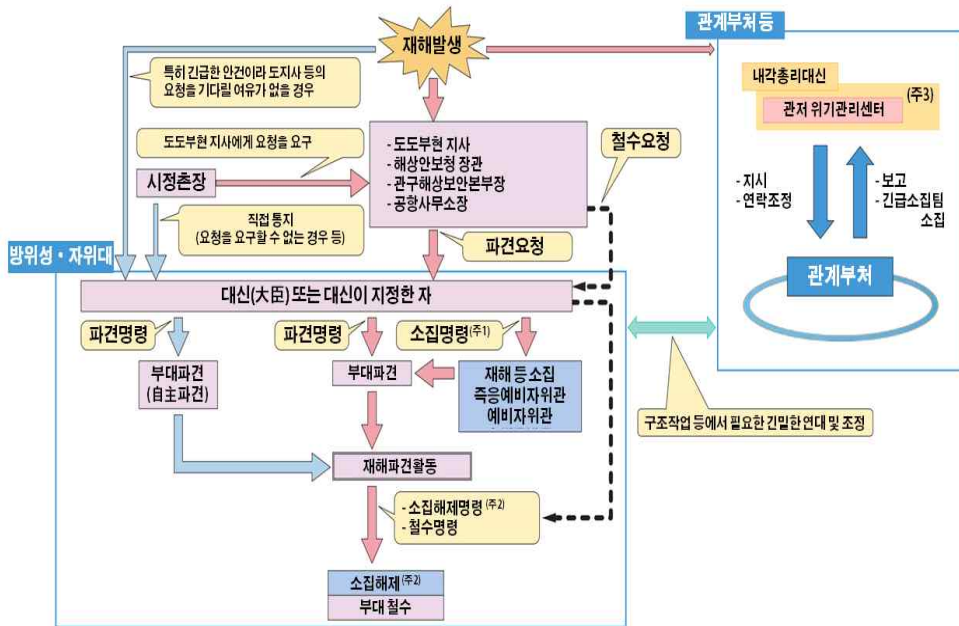
<표 9> 즉응예비자위관 소집훈련 협력체제

4-4. 재해파견 등 평시 예비전력의 운용 관련

현재 자위대 예비전력의 활용은 국민보호와 방위출동 차원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재해파견을 위한 예비전력의 소집은 총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만큼 신중한 결정을 통해 예비전력을 재해파견에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예비군 운용에 대한 재해파견 관련 법적 근거를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 국토 장경이 3,000 Km에 이르고 섬나라 국가인 일본은 태풍, 지진, 쓰나미 등 자연 재해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파견이 자위대의 역할에 있어 중요하며, 필요시 즉응예비자위관과 예비자위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국민보호 파견명령이 가능하도록 다음 (표 10)와 같이 되어 있다.

<표 10> 재해 대처 관련 예비전력 운용체계



(주1) 즉응 예비자위관 및 예비자위관의 소집은 방위대신이 필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주2) 방위상이 즉응 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의 소집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주3) 자연재해, 원자력재해, 사고재해 등의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각 부처의 국장급 요원으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소집한다.
 더욱이 극심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총리 등의 판단에 따라 관계 각료회의가 개최되고 상황에 따라 정부대책본부의 설치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된다.

재해파견은 도도부현 지사 등이 재해 시에 방위상 또는 방위상이 지정하는 자에 대해 부대 등의 파견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방위상 등이 3요건(긴급성, 비대체성,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부득이 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경우 부대 등을 파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해파견, 지진방재파견, 원자력재해파견에 관하여, ① 파견을 명령 받은 자위관은 자위대법 제94조(재해파견시 등의 권한)에 근거하여 피난 등의 조치(경찰직

무법 제4조) 등이 가능하다.② 재해파견은 예비자위관 및 즉응예비자위관에게 지진방재파견 또는 원자력 재해파견에서는 즉응예비자위관 소집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특별부대를 임시 편성할 수 있다. 이는 도도부현 지사 등이 구역 내 재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도도부현 등의 재해구조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위대의 파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구상에 의한 것이다.3)

실제 2018년 7월 호우, 2018년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 에서 즉응예비자위관이, 2019년 동일본 태풍(제19호), 2020년 7월 호우에는 즉응예비자위관 및 예비자위관이 소집되어 물자수송과 생활지원 활동 등에 종사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대방지를 위한 재해파견에서 의사, 간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예비자위관을 소집하여 자위대병원 등에서 의료지원 등의 임무를 맡았다.4)

4-5. 예비자위관 채용 : 연계성

예비전력의 채용과 관련 즉응예비자위관의 경우 병장 이하의 채용 상한 연령을 32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2019년에는 자위관 경험이 없는 예비자위관보에서 예비자위관으로 임명된 인원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이후 즉응예비자위관에 임용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자위대 조종사 민간활용제도5)를 통하여 민간으로 재취업한 항공기 조종사를 예비자위관으로 임용하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예비자위관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 국방분과위원회는 각국의 예비군에 비해 일본 자위대의 예비전력의 규모, 기능,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 영관 예비역에서 외국 군대와 같이 장군 등 고위직의 계급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상은 예비자위관補이다. 18세 이상 3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되,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18세 이상에서 보유 기능에 따라 53-55세 미만으로 한다. 주요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예비자위관 후보 기능자격6)

- 3) 毎日新聞, <https://mainichi.jp/premier/politics/articles/20191020/pol/00m/010/002000c> (검색일 : 2022년 5월 8일) 태풍 19호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자위관 소집이 이루어졌다.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소집된 것으로 자위대와 함께 재해파견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4) 2020년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감염확대방지를 위한 재해파견에 대해서는, 의사, 간호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는 예비자위관을 소집하여, 의료지원 등에 종사하였으며, 자위대는 지금도 대량접종회장을 동경, 오오사카 등에 설치하여 조직적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 5) 자위대에서는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자위대의 젊은 조종사가 민간항공회사 등으로 무질서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 연령 이상의 조종사를 민간항공회사 등에서 활용하는 제도로서 일본 항공업계 등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도 사전지정제도를 통해 활용하고 있다.
- 6) 방위성, <https://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405/2.html>(검색일 : 2022

기능구분	기능의 자격
위생	의사, 치관 의사, 약제사, 임상심리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임상공학기사, 진료방사선기사, 임상조사기사, 간호사, 구급구명사(준간호사자격 보유), 영양사, 준간호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어학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한국어, 아라비아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정비	1급 대형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사, 1급 또는 2급 이륜자동차정비사, 2급 가솔린자동차정비사, 2급 디젤자동차정비사
정보처리	시스템 분석가, 프로젝트 매니저, 테크니컬 엔지니어 등
통신	종합무선통신사, 육상무선기술사, 제1종공사 담임자 등
전기	제1종, 2종, 3종 전기주임 기술자
건설	1급 또는 2급 건축사, 측량사, 측량사보조, 1급 또는 2급 건설기계 시공기사, 목조건축사, 1급 또는 2급 건축시공 관리기사, 1급 또는 2급 토목시공 관리기사, 1급 또는 2급 관공사 시공 관리기사
방사선 관리	제1종 또는 제2종 방사선 취급 주임자
법무	변호사, 사법서사
인사	유체위생보전사, 납관사
해상자위대예비자위관후보	1급 해기사(항해, 기관), 2급해기사(항해, 기관), 3급 해기사(항해, 기관), 4급 해기사(항해, 기관), 5급 해기사(항해, 기관)

년 5월 16일)

5. 동원 제도

5-1. 법적 근거

일본 정부는 최근 안전보장 환경이 한층 엄중함을 더하고 있다고 본다. 2015년에 성립된 평화안전법제에서는 어떠한 사태에서도 끊임없는 대응을 가능하도록 '존립위기 사태'나 '중요영향 사태' 등의 정부로서 대처해야 할 사태를 새롭게 정의했다. 이와 연계하여 자위대 예비전력의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표 8)과 같다. 육상자위대에서는 「자위대법」(1957년 법률 제165호) 등의 규정에 근거해 유사시 필요한 방위력을 급속하고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즉응 예비자위관 및 예비자위관의 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표 8> 자위대법 내 예비자위관 관련(제5장 5절)⁷⁾

	정 의	자위대가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무력공격사태	무력공격이 발생한 사태 또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절박하다고 인정되기에 이른 사태 [사태 대처법 제2조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위대의 방위출동 [자위대법 제76조 제1항] • 예비 자위관에 대한 방위 소집 및 국민 보호 등 소집 [자위대법 제70조] • 즉응 예비 자위관에 대한 방위 소집 및 국민 보호 등 소집 [자위대법 제75조의4] • 국민 보호 등 파견 [자위대법 제77조의4]
존립위기사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거에서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 [사태 대처법 제2조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위대의 방위출동 [자위대법 제76조 제1항] • 예비 자위관에 대한 방위 소집 [자위대법 제70조] • 즉응 예비자위관에 대한 방위 소집 [자위대법 제75조의4]
무력공격예측사태	무력공격 사태로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사태가 긴박해지고 무력공격이 예측되기에 이른 사태 [사태 대처법 제2조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출동대기 명령 (방위출동 준비) [자위대법 제77조] • 예비 자위관에 대한 방위 소집 및 국민 보호 등 소집 [자위대법 제70조] • 즉응 예비 자위관에 대한 방위 소집 및 국민 보호 등 소집 [자위대법 제75조의4] • 자위대의 전개 예정지역에 대한 방어시설(진지 등) 구축 [자위대법 제77조의2] • 국민 보호 등 파견 [자위대법 제77조의4]
중요영향사태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 등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 [중요영향사태법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방지원활동으로서의 물품, 역무제공 등 [자위대법 제84조의5]

7)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E4%BA%88%E5%82%99%E8%87%AA%E8%A1%9B%E5%AE%98> (검색일 : 2022년 5월 8일)

5-2 인원 동원

자위대의 예비자위관 관련법에 있어 향후 쟁점은 현실적인 가용병력 확보이다. 현재까지는 현실적인 외부의 무력침공 사태를 상정하지 않은 평시운용을 중심으로 부대와 예비전력을 편성해왔으나, 향후 센카쿠열도 등 영토분쟁은 물론 중국의 대만 침공과 한반도 유사시 등 앞서 (표 8)에서 제시한 유사사태시 예비전력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입법과 예산확보, 훈련체제 등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위대 구성을 보면 장교 및 부사관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전시 기간편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유사시 일반 사병들을 예비전력 중심으로 총원한다면 단기간 내 인력구조와 부대구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안보환경이 엄중하며 외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전력 확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자위대법 뿐 아니라 국민보호법과 별도의 예비전력 운용을 위한 법 제정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 제안한 5년 이내 GDP 대비 2% 방위비 증가가 현실화된다면 예비전력의 확충도 가시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5-3. 물자 동원

○ 일본 정부의 문제 의식

- 원활한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충분히 조기에 사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
- 유사시 대피계획 확립을 위해서는 피난처, 소개 생활 거점을 다수 확보하여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사전에 민간 수송 수단을 확보하고 지정 공공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지정 공공기관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즉각 현실성 있는 사태를 상정하여 연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 * ‘도상 검토회’ 등을 도도부현에서 개최, 정부의 구체적인 시나리오 제시
- 무력공격사태(재래무기 사용부터 핵 공격까지)와 긴급대처사태를 염두에 두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시설을 대피 시설로 지정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해야 한다
- 남서방면 특별 방어계획을 책정해 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긴급사태시 남서방면 특별 임무부대 사령관을 임명해 지휘통솔의 일관성 도모
- 적십자 국제위원회(ICRC)와 같은 국제적인 인도기구의 중개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부터 ICRC와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

○ 2007년 물자 동원은 ‘국민보호법’에 의거 최초 제기된 이후 2015년 안보법제 개정시 일부 보완되었으나, 2022년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이를 체계화 제시하였다.

6. 최근 동향 및 비전

6-1. 쟁점 및 동향

6-1-1 국가 총력전 체제 정비 추진 : 국가안보전략 개정(22년 12월)

일본은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뿐 아니라 외교력·경제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력을 활용하여 안보환경과 여건을 창의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공공 인프라 정비, 사이버 안전보장, 일본 및 우방국의 억제력 향상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4개 분야에서의 대응을 관계부처의 협력 틀 하에서 추진하여 종합적인 방위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보호라는 명분 하에 국가 총력전 체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 패전국으로서 교전권을 부인해 온 일본 안보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일본의 예비전력 분야의 변화가 주목된다.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정부 내외 조직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국가 전체의 방위체제를 강화될 것이며, 국가, 중요 인프라 등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가능한 한 미연에 공격자의 서버 등의 침입·무해화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대해 필요한 권한이 부여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갈 것이다.

미일 동맹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미군 등의 원활한 활동 확보를 위하여 자위대의 탄약, 연료 등의 수송·보관 제도 정비, 민간시설 등 자위대, 미군 등의 사용에 관한 관계자·단체와의 조정, 안정적이고 유연한 전파이용의 확보, 민간시설 등에 의하여 자위대의 시설이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으로 실전태세를 위해 탄약 보유를 확대한다는 방침과 관련 동향이 주목된다.

원자력 발전소 등 중요한 생활 관련 시설의 안전 확보 대책, 국경 도서 지역으로의 불법 상륙 사안 대책 등에 관해 무력공격사태 외에 다양한 사태·단계의 위기에도 끊임없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자위대·경찰·해상보안청 등에 의한 연락 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장비·체제·훈련의 충실 등 대처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일본에 직접 위협이 미치는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일본 국내의 폭넓은 분야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적인 방위체제 강화의 일환으로서 자위대·해상보안청에 의한 국민보호에 대한 대응, 평소 훈련, 유사시 전개 등을 목적으로 한 원활한 이용·배비를 위해 자위대·해상보안청의 요구에 근거해 공항, 항만 등의 공공 인프라 정비나 기능을 강화하는 정부 횡단적인 구조를 창설한다. 아울러 유사시의 대응도 반영한 공항·항만의 평소 이용·활용에 관한 룰 만들기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대응은 지방공공단체·주민 등의 협력을 얻으면서 추진하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대피 등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검증한 후 국가, 지방공공단체, 지정공공기관 등의 연계를 추진하면서 제도면을 포함

한 필요한 시책을 검토한다.

<도표 1> 일본 정부와 지자체 공동훈련

형태	훈련내용 (가정)	일시	장소 (누적회수)
실기동훈련	긴급대처사태 상정 훈련	2021.11.10	토야마현(12회)
	무렵공경예측사태 상정 훈련	2022.1.14	코치현(4회)
			에히메현(10회) 야마구치현(4회)
도상훈련	폭발물을 사용한 테러	2021.7.7	미에현(4회)
	각종 검토회	2021.8.20	나라현(5회)
	화학제를 사용한 테러	2021.11.16	군마현(4회)
	농성 사안	2021.11.19	오이타현(8회)
	화학제를 사용한 테러, 폭발물을 사용한 테러	2021.11.22	카나가와현(7회)
	각종 검토회	2021.12.10	시가현(6회)
	각종 검토회	2021.12.14~15	시마네현(5회)
	폭발물을 사용한 테러	2021.12.19	미야기현(5회)
	각종 검토회	2022.12.22	나가사키현(5회)
	각종 검토회	2022.1.25	도치기현(4회)
	불심선 발경사안, 화학물질을 사용한 테러	2022.1.25	후쿠이현(14회)
	폭발물을 사용한 테러, 농성 사안	2022.1.26	교토부(4회)
	각종 검토회	2022.1.28	이와테현(9회)
폭발물을 사용한 테러, 농성 사안	2022.2.2	아이지현(7회)	

6-1-2. 경제안보 관련 국가적 대처

에너지 안전보장 확보를 위해서는 자원국과의 관계 강화, 공급원 다변화, 조달 리스크 평가 강화 등의 방법과 더불어 재생 가능 에너지나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최대한 활용, 이를 위한 전략적인 개발을 강화한다. 동맹국·우방국, 국제기구 등과도 제휴하면서,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향한 방향을 강화해, 유사시에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에너지 공급 체제를 구축한다.

식량안전보장에 관해 국제사회의 식량 수급이나 무역 등을 둘러싼 상황이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며, 식량이나 생산 자재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의 식량 안전보장상의 리스크가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식량공급 구조를 전환해 나가는 것 등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입과 적절한 비축을 조합하면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존도가 높은 품목이나 생산자재의 국산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곡물 등의 생산 확대, 사료 증산, 퇴비 등 국내 자원의 이용 확대를 추진하는 것 외에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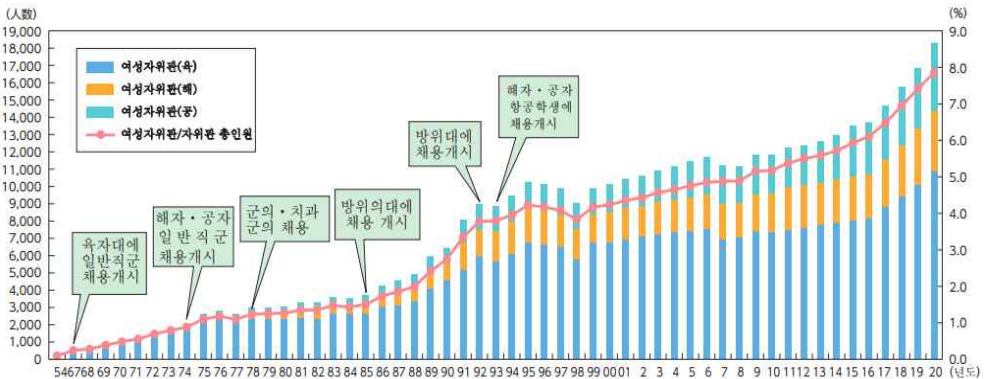
위한 대책이나 적절한 비축 등을 병행하여 강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확보하고 일본의 식량 안전보장 강화를 도모한다.

일본의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사시의 자원이나 방위 장비품등의 확보에 수반하는 재정 수요의 대폭적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재정 여력이 지극히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 일본 안전보장의 초석인 경제·금융·재정의 기반 강화에 부단히 대처한다. 이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포함한 안전보장정책을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전제이기도 하다.

6-1-3. 여성자위관 활용 관련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소자화 및 고령화 추이가 지속되면서 향후 방위 임무에 종사할 자위관 모집과 활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퇴직자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예비전력 확보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 여성 예비자위관이다. 현재 자위대 내 여성자위관의 비율은 7% 수준이며, (도표 9)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1> 여성자위관 추이



여성 예비자위관에 대해서는 예비자위관 제도 출범 때부터 간호사 등의 직종에서 모집돼 그 요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다. 일반 여성 예비자위관으로서는 1995년에 모집되어 2004년 현재 약 1,100명에 이르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2년에는 영관 장교의 예비자위관도 채용되게 되었다. 2008년 현재 약 24만명의 현역에 대해 약 5만 9천명, 2013년 현재 약 23만명의 현역에 대해 약 3만 2천명의 예비자위관이 등록되어 있다. 현재의 예비자위관의 정원은 약 5만 명이지만, 충족률은 정원의 약 70%에 불과해, 설령 현재의 정원대로의 인원이 모인다고 해도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외국의 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비역은 현역의 절반에서 동수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욱이 징병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

는 예비역이 현역보다 많아 몇 배에서 십수 배나 되는 경우도 많다. 자위대 및 예비자위관 제도가 전체 지원제임을 감안하더라도 원래 자위관의 국가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군에 비해 높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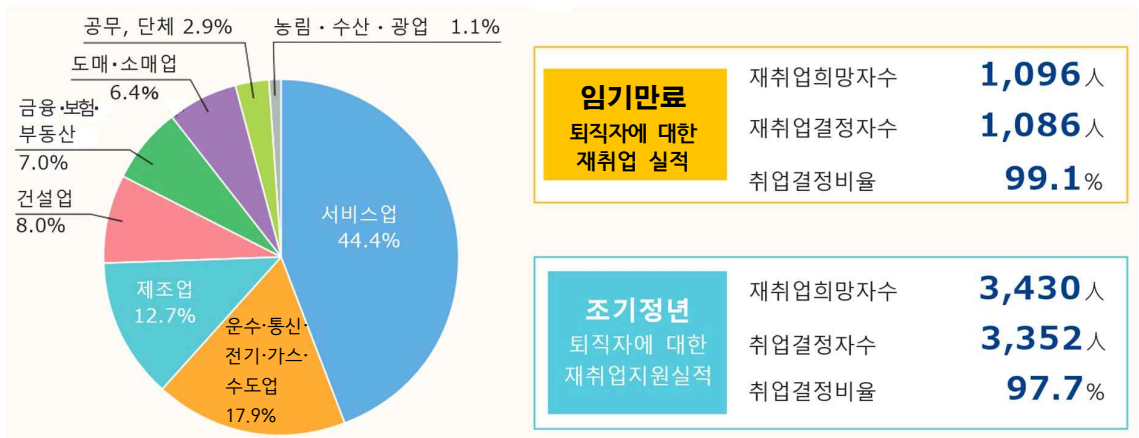
이를 위해 방위성은 2015년 제정된 ‘여성활약추진법’⁸⁾에 근거하여 다음과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여성 예비전력 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자위관의 확충과 함께 즉응예비자위관을 비롯한 여성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한일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6-1-4. 전역 후 재취업 관리

자위대의 정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자위관은 50대 중반(조기정년제 자위관) 또는 20대에서 30대 중반(임기제 자위관)에 퇴직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퇴직 이후의 생활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재취업이 필요하다.

재취업 지원은 고용주인 국가(방위성)의 책무이며 자위관의 장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등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방위성은 직업을 직접 소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재단법인 자위대 원호협회가 후생노동상과 국토교통상의 허가를 받아 퇴직자위관을 위한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표 1> 자위관 2021년 재취업 현황(출처 : 2022 방위백서)



예비역의 재취업은 중요한 쟁점의 하나이다. 특히 모병제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단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연계성도 동일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8) 내각부 남녀공동참가국. https://www.gender.go.jp/policy/suishin_law/index.html
(검색일 : 2022년 5월 16일)

일본 재취업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6-2. 미래 예비전력 발전계획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환경과 여건, 위협인식 대처, 미국과의 동맹 강화 등을 종합해 보면 공동의 관심과 쟁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미래의 예비전략 발전 관점에서 일본의 예비전력 관련 추진전략과 정책이 주는 시사점과 한일 협력방안을 정리해 본다.

첫째, 유사시 대비 차원의 국가 총력전 체제와 예비전력 운용 관련 국제협력이다. 지정학적 여건과 역내 안보 정세의 불안정은 한일 양국의 공동과제가 되었다. 자국 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와 제도적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 총력전 체제가 도움이 될 것이며,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과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 협력체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안보 차원의 에너지, 식량, 유류 등의 물자동원을 국제적 수준으로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

둘째, 탄약과 장비 관련 한일 상호운용성 증대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우크라이나전쟁의 교훈은 전쟁 지속능력을 위해 탄약과 장비 보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한 상호운용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탄약과 장비 관련 상호 군수물자지원협정을 체결하고 평시에 이를 유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사시 예비전력을 적시에 상호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 방산협력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예비전력 분야별 Know-How를 공유하여, 실효성있는 제도발전을 모색한다. 자위대는 대규모 재해대처 관련 예비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적 정비가 체계적이다. 또한 한일 양국은 소자화 및 고령화로 인해 병역 자원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간부 및 전문성 위주의 현역 및 이를 보완하는 예비역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국의 징병제와 일본의 모병제로 인한 상호보완성도 있으며, 군 상호 유기적 연계성을 높여가기 위한 자위대의 예비자위관제도의 유용성, 특히 여성자위관 모병 및 여성 예비자위관제도 운용은 검토가 필요하다. 재취업과 예비전력의 상호 연계성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예비전력 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효율성 제고 노력이다. 일본은 지방협력본부으로 일원화되어 있지만, 한국은 병무청과 국가보훈처라는 전국적 조직으로 예비전략 자원 관리가 분산되어 있다. 병력 규모와 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 예비전력은 정부(군, 자위대)가 운용하며, 이를 위한 기획과 제도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일 양국의 공통된 과제이기도 한다.

| 저자소개 |



권태환 |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 예비역 육군준장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서강대 정책대학원에서 북한 및 통일정책 석사, 일본 다쿠쇼쿠대학에서 안전보장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방부 정책실에서 대외정책 총괄을 담당했고, 일본 자위대에서 지휘참모대와 국방대학원 과정을 연수하고, 오카자키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국방무관과 육군무관 등을 역임했다. 전역 후 세종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 국방대학교 초빙교수 등을 통해 국내외 외교안보 경험을 토대로

2018년 한국국방외교협회를 설립하였다. 현재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한일군사문화학회 회장, 북극성연구소 소장, 국방부, 합참 및 육군 정책자문위원으로 국방외교 발전과 후진양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새로운 안보환경과 한국의 생존전략', '통일한국의 비전과 군의 역할', '한일 새로운 미래, 어떻게 만들것인가?'와 번역서로 '근대일본의 군대' 이외 '일본의 군사전략'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주간국제안보군사정세'를 2019년 이후 발행하고 있으며, 국제안보정세와 일본의 안보군사,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등 국방외교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호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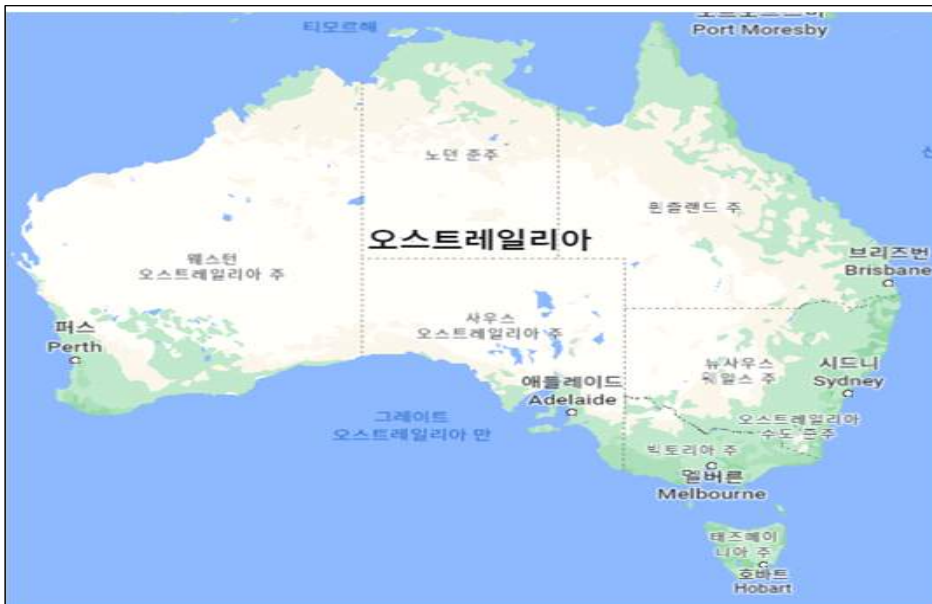
김진부(호주 주재 국방무관)

1. 일반현황

1-1. 국가 개요 ('22년도 기준)

인구	GDP	1인당 GDP	국방예산 (GDP 대비)	예비전력 예산
2천6백만	1조 6,100억불	65,005불	487억불 (GDP대비 2.11%)	160억불 (국방예산 대비 32.8%)

1-2. 지정학적 위치



- 국명: 호주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
- 면적: 774만km(한반도의 35배, 세계 6위)
- 화폐단위: 호주달러
- 종족: 앵글로색슨(영국 및 호주) 81%, 중국계 5.5%, 원주민 3.2%
- 언어: 영어
- 종교: 기독교 27.3%, 카톨릭 22.6% 기타 20%, 무종교 30.1%
- 정치형태: 입헌군주제(영국 국왕이 국가원수, 총독이 대리), 의원내각제, 양원제(상원 76석, 하원 150석)

호주는 지리적으로 대륙과 이격되어 있고,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이 지역 내 안보 환경을 주도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일본(러시아, 한국 포함) 등 지역 내 주요 강대국과의 전략적 경쟁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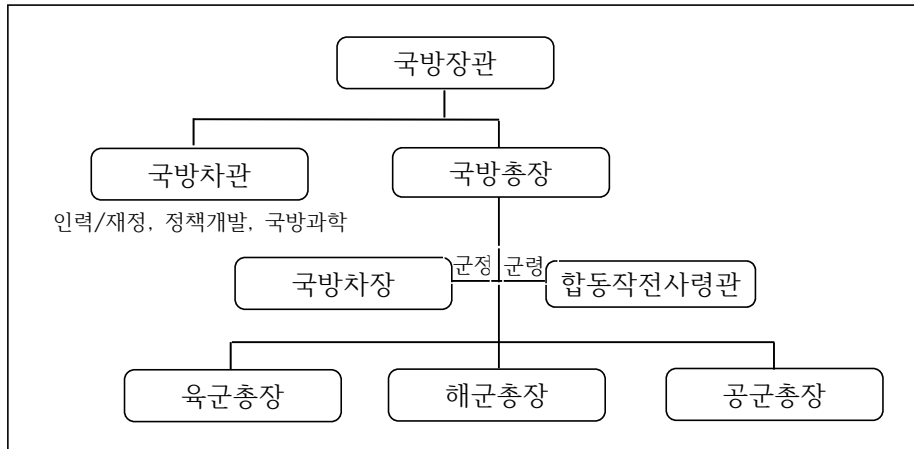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역, 특히 해상 무역에 위협이 발생하여 지역 내 경제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호주의 최우선 과제이다.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원으로서 자국의 적극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따라 미국, 일본, 인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경제·통상 협력, 자원·에너지분야 협력, 외교·국방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이를 통해 역내 안보질서에서 역할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의 부상은 호주에게 있어 ‘경제적 기회’이면서 동시에 ‘안보적 도전’으로 볼 수 있다.

2. 국방의 특징

2-1. 국방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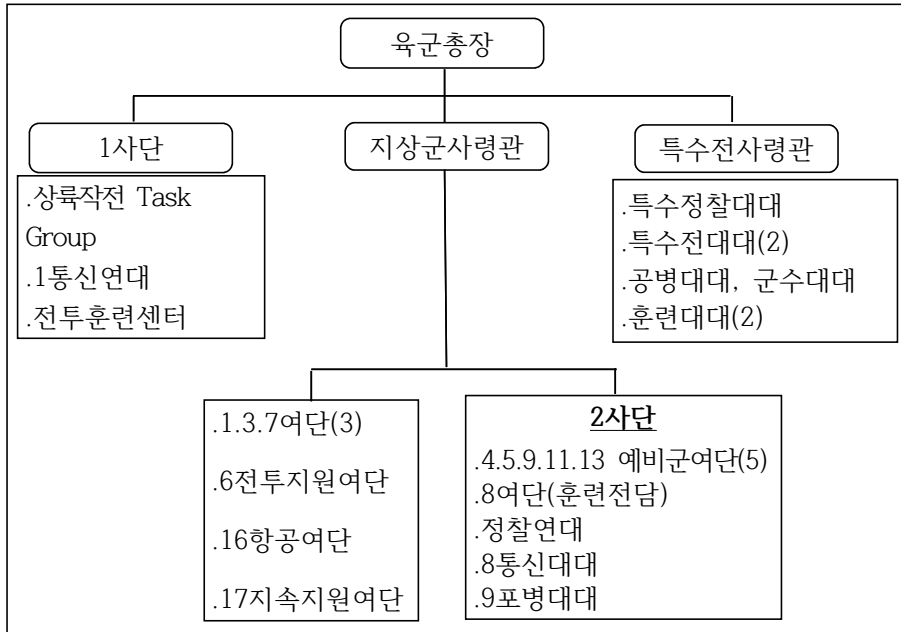


호주 국방조직의 지휘 권한은 국방장관에게 있으며, 국방장관 예하에 국방차관과 국방총장으로 나뉘어 업무가 분장된다.

국방차관은 인력 및 재정, 정책개발, 국방과학 분야를 관장하고, 국방장관은 평시 국방총장의 보좌를 받아 3군을 통합 지휘하며 전시에는 합동작전사령관의 보좌를 받아 3군의 작전 부대를 직접 지휘한다.

각 군 총장은 모병, 훈련, 장비 획득 및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2. 육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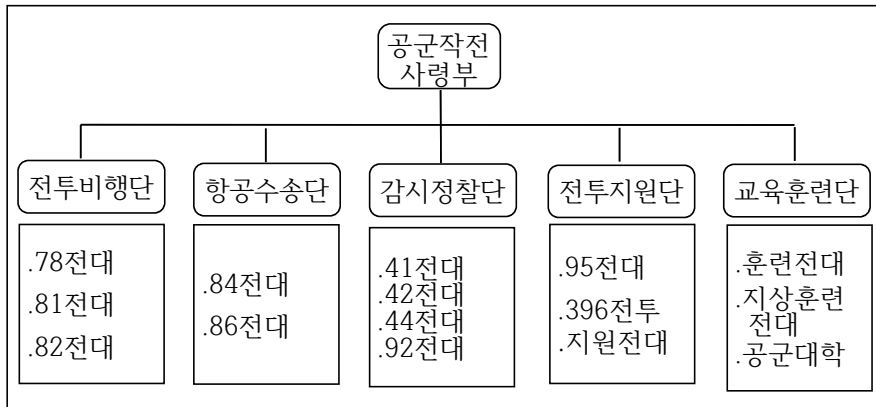
육군은 약 3만 명으로서 크게 지휘부-육군본부(Headquarter)와 1사단, 지상군사령부, 특수전사령부으로 구성되며 예하에 작전임무 수행부대가 편성되어 있다. 인도-태평양 인접국들의 육군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지만 지역적으로 가장 역량 있는 군대 중 하나로 평가되며, 육군은 중동과 남아시아에서의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평화 유지 및 인도적 지원과 재난 대응 임무에도 참여하고 있다.

2-3. 해군



호주해군의 임무는 영해방위, 해안순찰, 경계, 육상과 지역 해안에 대한 적의 수상함·잠수함 공격에 대비하고, 해안경비 및 해저 기뢰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는 것이다. 호주의 해군은 세계 군사 작전과 지역 평화유지 및 재난대응 임무를 지원하는 능력을 가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모가 크고 강력한 해군 중 하나로 평가된다.

2-4. 공군



공군작전사령부는 전투비행단, 항공수송단, 감시정찰비행단, 전투지원단, 교육훈련단 등으로 구성되며, 추가하여 우주작전지원센터(Air Warfare Centre)가 있다. 공군의 주요 기능은 공세/방어 대응, 육상·해상 공격 및 저지이며, 국내외 작전과 관련된 광범위한 거리를 고려 시 군대와 장비의 수송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5. 전략환경 평가

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미·소 대립으로 인해 3차 세계대전 및 핵전쟁 위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이격되어 위협인식이 낮았으며, 소련 붕괴 이후에도 미국주도의 단극질서가 유지되면서 호주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없었다.

현재 호주가 직면한 전략적 환경 및 위협은 이전과 다르며, 미국주도의 단극질서유지는 더 이상 불가하며, 치열한 미중경쟁은 호주의 국익에도 위협이 될뿐만 아니라 잠재적 분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은 대규모 군사력 증강노력과 더불어 상당한 경제적 발전을 꾀하였으며,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호주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내 국가들에게 이점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지만, 현재 남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남중국해 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호주에게 있어 전략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는 미국, 일본, ASEAN, 인도, 한국 등 동맹 및 우방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방역량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북제재 이행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이제 더 이상 호주가 지니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나 전략적 경고시간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전략적 경고시간이 부재하다는 것은 신속한 군사적 조치를 위해 군사적 준비태세 발전, 능력발전 가속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 호주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수립, 능력발전, 전쟁준비 등 10년의 전략적 경고시간(warning time) 을 고려하고 있다.

* 국방능력 강화를 위한 3단계 계획

1단계 (Force-in being) 긴급조치 : 3년, '23 ~ '25년

2단계 (Objective integrated force) 전력획득 강화 : 5년, '26 ~ '30년

3단계 (Future integrated force) : '31년 이후

현대전은 미사일시대(missile age)로서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의 증대로 인해 호주의 지리적 이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2-6. 국방전략 목표, 달성방안

전략적 이익	목표	달성 방안
안전하고 복원력(resilient) 있는 호주	호주를 위협, 공격,강압하는 국가,비국가 단체를 억제/거부/격퇴	호주군이 군사적 위협에 독자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 보유
동남아시아, 남태평양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안정	동남아시아 해양안보와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기타 태평양 도서국가의 안보능력 신장을 지원	남태평양에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주요 안보동반자로서 위치를 공고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호주의 국익을 저해하는 국제질서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에 기여	미국을 비롯한 우호국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호주의 국익수호

2-7. '23 국방전략검토(Defense Strategic Review)

- . 新 국방전략 : 거부 전략 (strategy of denial)
 - * 장거리 타격능력, 수중작전, 대공미사일 등의 A2AD에 중점
- . 국방전략 목표 : △유리한 전략적 환경 조성, △호주의 국익을 침해하는 적대행위 억제, △필요시 충분한 군사력으로 대응

기존의 국방전략은 중소국가들의 저강도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위주였으나, 新 국방전략은 지역내 잠재적 위협 대비 호주 본토방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서 파트너국가들과 외교적 관여 및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전력 구조 : 전력 균형유지(balanced) ⇨ 전력 집중(focused)
합동군(육.해.공군) ⇨ 통합군(우주, 사이버 포함)

(해상) 재래식무기를 장착한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고, 장거리타격능력, 대공방어, 대잠전 수행 등 전투함대 능력을 보강하며, 병력유지가 긴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상) 연안기동함(상륙함), 장거리타격(지상기반 대함타격 능력), 대공방어, 근접전투수행능력과 호주 북부지역 안정화 및 후속부대 역할 수행을 위해 예비군여단 능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보병전투차량 레드백 획득 관련 450대에서 129대로 축소하고, 자주포 2단계 추가획득사업 취소를 통해 HIMARS 및 지상기반 대함타격능력 획득을 명시하였다.

(공중) F-35A, F/A-18 전투기에 장거리 대함미사일 탑재, F-35A를 블록4로 업그레이드하고 합동타격미사일(JSM) 탑재, MQ-28A 무인 전투기를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 B-21 전략폭격기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다층통합방공(IAMD) 작전수행능력을 위해 중고도 방공미사일 구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주.사이버) 우주사령부를 합동능력지원단(Joint Capabilities Group, 7.1부)으로 이전함으로써 우주 . 사이버 능력을 보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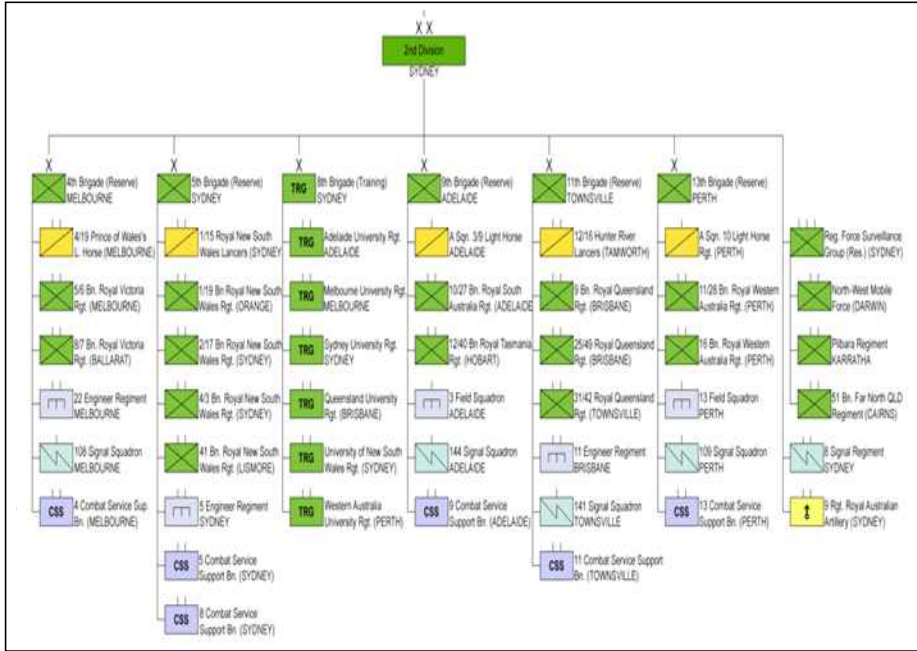
<p>. 기술 및 비대칭 우위 주요 군사기술분야에서 비대칭적 우위 달성, 오커스 협력을 통한 첨단무기 도입(잠수함, 극초음속), 국방과학기술 혁신체계 구비(예산, 자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p> <p>. 병력 국방의 일부로서 호주 예비군 제도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검토 필요. 現 총병력(Total workforce) 관리모델은 예비군 운용방안을 향상시켰으나, 현역을 보완하는 수준 이상의 역할정립 필요</p> <p>. 호주-미국 동맹 및 역내 국방 파트너십 강화 미국과 긴밀한 협력, 인태지역 국가들과 국방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 유지</p>
--

상기 사항 관련 정부에 대한 건의형식으로 국방전략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국방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최신화를 통해 새로운 한국-호주 국방협력의 기회 창출 판단이 필요하다.

2-8. 군사력 규모 : 모병제, 현역비율 약 60%, 예비군비율 약 40%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현역	59,600명	29,400명	15,300명	14,900명
예비군	29,750명	20,100명	3,950명	5,700명
주요부대(개)		전차52대 장갑차 253대 공격헬기, 수송헬기 등	잠수함 6척 구축함 2척 호위함 8척	전투기 93대 수송기 54대 전자전기 13대 공중급유기 7대

2-9. 육군 예비군 사단(2사단)



호주는 육군 2사단이 예비군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하에 6개여단(4.5.8.9.11.13여단), 2개연대(8통신연대, 9연대), 지역정찰부대가 있다. 특히 8여단은 훈련을 전담하는 여단으로서 시드니, 브리즈번 등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다.

2-10. 해군 예비군

예비군 사령부는 해군 예비군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관리, 훈련을 담당하며,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에 위치하고 있다.

예비군사령부 예하 5개의 예비군 부대(동부, 남부, 중부, 북부, 서부)가 지역별 행정 및 훈련을 담당하며, 각 예비군부대(Reserve division)에는 해양작전 지원단, 기지 지원단, 해상교역지원단, 전문가지원(의무, 법무 등) 조직이 있다.

2-11. 공군 예비군

예비군 사령부는 공군 예비군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관리, 훈련을 담당한다. 예비군 사령부 예하 공군 예비군훈련단은 기초군사훈련, 보수훈련을 담당하며, 예하에 예비군 훈련전대(reserve Training Wing)는 작전기술 기초, 전문 교육을 담당하며, 예비군 지원전대(reserve Support Wing)는 행정, 인력관리를 수행하며, 예비군대대가 편성되어 있다.

예비군대대는 기지·활주로 경계, 공중 감시정찰 지원(레이더, 공역관리), 의무지원, 통신정보체계, 정보수집·분석·전파 임무를 수행한다.

2-12. 병역제도

2-12-1. 법적 근거

호주의 병역제도는 호주국방법(Defence Act1903)에 법적 근거를 두고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병역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과 병역 의무자에 대한 의무와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호주 예비군과 관련된 규정도 포함한다.

2-12-2. 병역자원 관리

7개의 복무제도(Category)로 구분하여 병력을 관리한다.

군 미복무		군 복무				
CAT1	CAT2	CAT3	CAT4	CAT5	CAT6	CAT7
민간인	예비군				현역/상비군	

CAT1: 군 작전, 군 능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국방관련 공무원을 말한다.

CAT2: 예비군,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으나, 현재는 군에 복무하지 않고, 소집(동원)시에만 군에 복무한다.

CAT3: 조건부 복무제도로서,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현역이 보유하지 않은 기술능력을 제공한다. 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복무 중에는 숙소제공, 보험혜택이 주어진다.

CAT4: short notice call for duty, 단시간내 응소가능 예비군으로서 고강도 훈련 및 개인이 동의한 단시간 내 응소 의무가 있으며, 응소시간 및 복무기간은 개인별로 상이하다. 직책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고, 기간근무 직책을 부여받으며, 능력요구사항은 각 군에서 결정한다. 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복무 중에는 숙소 제공 및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CAT5: enduring pattern of service, 연중 파트 타임으로 복무, 다양한 활동과 작전에 참가하며, CAT 6에 해당하는 현역이 보유하지 않은 기술 및 능력을 제공한다.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복무 중에는 숙소가 제공되고, 파병 및 훈련 기간 중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CAT6: 유연근무 선택이 가능하며, 월 1~3주 근무 또는 연 6개월 근무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CAT7: 현재 full-time으로 복무중인 현역을 언급한다.

3. 예비전력 현황 및 동향 분석

3-1. 예비군 지휘체계, 인원.부대관리

호주 예비군 제도는 호주 현역과 동일한 모병제이다. 상군(Active)이 17,000여명, 소집대기(Standby) 예비군은 12,500여명이다.

지휘체계 관련, 해군 및 공군 예비군은 각각의 군에 현역과 통합되어 운용되고, 주로 현역 지원임무를 수행한다. 반면에 육군 예비군은 예비군 사단인 2사단에 소속되던지 또는 해군이나 공군과 동일하게 현역부대에 통합되어 현역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현역 또는 상군(active) 예비군 복무 이후에는 소집대기(standby) 예비군으로 전환되며, 소집(동원) 명령 발령 시 응소해야 한다. 주요 임무는 산불 진압, COVID-19 지원, 홍수피해 지원, 해외작전 지원 등이다.

3-2. 예비군 교육훈련

- 육군 예비군 교육훈련

구분	훈 련
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군사훈련(35일) : 개인화기 사격, 기본 전투기술, 응급처치, 팀워크, 시간관리 및 복원력 향상, 육군 훈련, 야외생활 및 독도법 . 직무훈련(최대 18개월) : 경험.직책에 따라 다수의 2~7주 단위 훈련프로그램 이수
일반 임무 수행 장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 기갑, 포병, 전자.정비, 공병, 보병, 군사경찰, 병참, 수송, 통신 . 기초군사훈련(35일) . 장교임관교육 : 가치관, 부대관리 및 리더십함양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의 훈련모듈 * 1개 훈련모듈은 16~23일, 통상 1년 반 ~ 2년내 이수 - 소대병력 지휘 - 리허설, 사격, 훈련계획 수립 등 훈련 - 대규모 훈련 시 - 병력지휘, 작전협조 등 훈련
특별 임무 수행 장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 보건, 재정, 법무, 군종, 관리, 항공, 공병, 교육 . 3개의 훈련 모듈로 구분, 특기별 9~41일 훈련

-해군 예비군 교육훈련

구분	훈 련
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군사훈련 (7~9주) : The Recruit School Common Training (RSCT)로 불리며, 기초군사훈련(체력, 제식, 해양, 가치), 팀워크 배양에 중점 . 수병 훈련(Sailor Training) : 특기별 수병훈련(전투시스템, 항해, 군수, 공병, 의무지원, 통신)
장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군사훈련(군 복무 경험이 없을 경우) . 실무교육(OJT): 직책별 부대교육 수행

- 공군 예비군 교육훈련

구분	훈 련
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군사훈련 (8주)
장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주 훈련프로그램으로 구성 - 공군 가치, 지휘 및 리더십, 화재안전 구급법, 통신, 팀워크, 사격, 위장, 군사법 . OJT 교육

3-3. 처우 및 보상

- 육군 예비군 * 참조 : army.defencejobs.gov.a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233\$(면세, 1일 6시간이상 근무시), 기간.기술수준.계급에 따라 상향 . 훈련 및 파병기회 부여, 이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 . 기술보유 시 민간에 상응한 기술수당 지급 . 의료보험 (치아포함) . 복무후 민간에 적용가능한 일류 수준의 기술.훈련 습득 . 리더십 함양, 자신감 향상
--

1년 최소 20일~ 최대 100일의 복무기간을 선택하고, 민간 직업과 병행하는 등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다.

. 분야별 복무 선호도 선택 가능

구분	categories	job types	지역 state	입소 방안 Entry methods
선택 내용	항공 행정 및 교육 전투 및 경계 통신, IT, 정보 공병 보건, 병원, 군종 군수, 서비스, 지원 장교, 관리 trades	전투 전투지원	State 선택 가능	reserve graduate-reserve officer-reserve qualified-reserve technical-reserve n o n technical-reserve

- 해군 예비군 (직책별 상이) * 직책별 의료보험 혜택 상이

- . 기상.해양학 담당 : 최초 303\$, 기초훈련 이후 303\$(면세), 의료보험
- . 복지장교 : 최초 지원시 290\$, 기초훈련 이후 290\$(면세) 의료보험 없음
- . 간호 : 최초 지원시 241\$, 기초훈련 이후 241\$(면세)
- . 방사선촬영 : 최초 지원시 233\$, 기초훈련 이후 233\$(면세)
- . 기간.보유기술에 따라 상향
- . 의료보험(치아포함)

- 공군 예비군 (직책별 상이)

- . 기지방호 담당 : 최초 지원시 144\$, 기초훈련 이후 188\$(면세)
- . 간호 : 최초 지원시 233\$, 기초훈련 이후 233\$(면세)
- . 기간.보유기술에 따라 상향
- . 고용 보장, 복지시설
- . 일류 수준의 기술.훈련 습득

3-4. 호주 예비군 제도 시사점

모병제를 택한 호주군이 예비군 모집 및 운용에 있어 어려운 점은 △ 예비군 복무 - 민간직업 - 가정 간 balance 유지, 이로 인해 예비군 지원율이 다소 저조하며, △ 예비군 훈련참석, 파병, 기타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민간직업과의 일정조율이 필요한 부분, △ 훈련기회 부족 등이다.

또한 △현역과의 상이한 훈련 수준.일정, 장비 가용성(제한된 예산) 문제로 인해 현역 부대원과의 협력 및 통합, △ 예비군 역할 및 능력,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또한 해결해나가기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제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호주군은 예비군 운용정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모병전략 및 전략커뮤니케이션 노력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및 예산증액을 실시하고, 예비군 제도도 유연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완내용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호주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같이 일반 전투원 외에 의료, 법무, 간호, 항해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구비한 예비군을 part-time 형식으로 모집하는 방안, 또는 현역 모집시 현역(x년) + part time 예비군(y년)으로 통합 계약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반드시 전시가 아니라 평시, 또는 위기시에 파병 또는 현역 부대에 투입하여 우리 군의 능력을 보강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부족한 전문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호주군은 예비군 훈련에 대해 민간과 협력하 '민간인증 자격' 제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비군들은 part-time 군 복무를 통해 무료로 민간인증 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비군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예비군 본인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4. 동원 제도

4-1. 법적근거

동원제도의 법적 근거는 호주 국방법(Defence Act 1903) Section 50D, Defense Force Regulation 1952이다. 총독에게 동원을 발령할 수 있는 상황 및 조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4-2. 조직체계/절차

호주 국방부 내 동원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는 '국방인사국(People Capability Division)'이며, 호주군의 인력 계획 및 관리, 복무 의무자들의 동원 및 군 복무 지원, 병력의 국내 및 해외 배치 등을 담당한다.

또한, 국방부 내 예비군 및 대체복무자들의 관리를 담당하는 '예비군 지원국(Reserves and Employer Support Division)', 군사법원과 법률적 문제를 다루는 '군사법무국(Military Justice Division)' 등의 부서가 있으며, 이러한 부서들은 각각 분야별로 국방부의 동원 업무를 수행하며, 호주 국방 인력의 효과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4-3. 인원 동원

호주 예비군에 대한 인원 동원은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주요테러 국가비상사

태와 같은 긴급 상황시에 발령된다. 모병제를 택한 호주군의 동원 제도는 우리 군의 동원제도와 달리 소집대기 인원에 대해 명령을 발행하며, 동원령 발령조건은 △전시 또는 전시와 유사한 작전, △국가 비상상황 및 전시준비, △평화유지 및 평화강제, △국가안보 및 국방이익에 영향을 초래하는 영연방 국가, 영토 또는 정부기관 지원 필요시, △기타 민간지원, 인도주의 지원, 긴급 의무지원, 재난구조 등이다.

동원 절차는 호주 행정평의회에서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호주총리와 협의 하고, 긴급상황에 대해 장관이 동의 시 호주 총독에 건의 후 발령된다. 호주 총독은 예비군 지역, 계층, 인원을 관보(gazette)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예비군 동원 명령을 발령한다.

4-4. 물자 동원

호주군의 물자 동원은 국방물자법(Defence Materiel Act)에 의거 긴급 상황이 나 국방력 확보를 위해 물자 동원제도인 'Defence Materiel Procurement (DMP)'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호주 예비군이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 항공기, 병기, 통신 장비 등 다양한 물자를 구매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4-5. 총독(Governor general)에 의한 예비군 동원(소집) 사례

시기	동원(소집) 사례
1차 세계대전 (1914-18)	. Ronald Munro Ferguson 제독, 전쟁참가를 위해 소집
2차 세계대전 (1939-45)	. Lord Gowrie 제독, 국내 및 해외전투 지원
한국전쟁 (1950-53)	. William McKell 제독, 참전한 호주군(유엔군) 지원
베트남 전쟁 (1962-72)	. Lord Casey 제독, 예비군 베트남으로 파병 및 참전
동티모르 (1999-2003)	. William Deane 제독, 동티모르 평화유지 및 안정 지원
이라크 아프간 (2001)	. Peter Cosgrove 제독, 호주군 작전 지원
산불진압 작전 (2020.1.4)	. David Hurley 제독, 산불진압에 약 3,000명의 예비군 투입

최근 '19~21년은 해외 파병과 달리 산불진압(bushfire assist), COVID19 지원, 기후변화 등 국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호주 예비군을 동원하여 광범위하게 운용한 기간으로서, 이를 통해 예비군 운용능력 극대화 제고 방안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평소 예비군 훈련은 단기간내 위기대응을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지역예비군은 지리적으로 익숙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경험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4-6. 호주 동원제도 시사점

호주군의 동원제도 특징은 모병제이다 보니 계약체계를 통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동원 대상자들이 이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통해 몇시간내 응소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 행동해야 하는지 잘 인지하고 있으며, 물자 동원 또한 계약을 통해 확보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다만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대규모 위협이 없다보니, 계약된 동원 능력 이상이 요구될 때의 상황을 가정하고 동원규모가 적절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미래 동향분석

5-1. ready reserve scheme 재도입 검토

'23년 4월에 발표한 新 국방전략검토에서는 호주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part-time 예비군제도 운용은 민간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주요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대규모 병력소집 및 동원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과거 1991~1996년까지 도입하여 운영(1996년 폐지)했었던 'ready reserve scheme(3,000~5,000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고로 ready reserve scheme 제도는 군 입대시 5년의 계약을 통해 1년은 full-time 현역으로 군 복무하고, 이후 4년은 part-time 군 복무를 실시하는 것인데, part-time 복무란 작전투입 필요시 단시간내 응소하여 연 50일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군은 이를 통해 고도로 숙련된 예비 전투력 유지가 가능하고,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5-2. 호주군 예비군 능력, 역할 재검토

호주 국방부는 특히 호주북부 지역 . 중요시설 경계 및 국내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예비군여단의 능력이 보강되어야 하고, 예비군 복무제도에 대해 현역을 보강하는 수준이 아니라 위기사 부대를 확장하는 등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호주 국방부는 이를 '25년까지 검토하기로 하였다.

5-3. 예비군 소속된 민간고용주와의 관계, 예비군의 헌신 홍보 강화

남호주 병원, 예비군 지원 우수상 수여 : South Australia Hospital wins prestigious national Reserve support award. "we provide reservists with access to 20 days' military leave per year" Ms Milson said. "In return for this support, the hospital gets the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tise gained from working in a Defence environment".

타인을 돕고 싶었던 꿈을 육군 예비군 간호장교로 이룬다. Army nurse touches lives of thousands of Veterans. While growing up in Melbourne, Dianne Hutchinson always knew she wanted to pursue a career helping people. Fast forward many years, and now a Major in the Army Reserve. Dianne has touched the lives of thousands of patients through her service as a Nursing Officer.



| 저자소개 |

김진부 | 호주 국방무관



육사 51기로 임관하여 연합사 작전참모부, 육군본부 및 국방부 정책실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국방 위기관리,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계획 작성 등의 핵심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국방대 및 미국 지휘참모대에서 국제정치, 군사학을 전공하였음. 현재는 한국과 호주의 국방협력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음.

싱가포르

이종철(前 싱가포르 국방무관)

1. 일반현황

1-1. 국가 개요(2021년 기준)

인구	GDP	1인당 GDP	국방예산 (GDP 대비)	예비전력 예산 (국방예산 대비)
589만 명	3,909억 USD	66,400 USD	약 120억 USD (약 15조 6천억 원)	?

싱가포르의 국방비는 매년 전체 예산의 약 20%, GDP의 3.2% 수준이며, 국방비는 전년 대비가 아닌 5년에서 1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배정 및 지출을 하며 갑작스럽게 국방예산을 조정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예비전력 예산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국방예산 중 인건비, 운영유지, 획득, 연구개발 예산을 제외하고 기타로 분류된 0.66% 속에 예비전력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1-2. 지정학적 위치



0 국명 : Republic of Singapore

0 면적 : 719.2 킬로미터

- 0 화폐 단위 : 싱가포르 달러(SGD)
- 0 환율 : 1USD = 1.38 SGD
- 0 민족 구성 : 중국계(74.2%), 말레이(13.3%), 인도계(9.2%), 기타(3.3%)
- 0 언어 : 영어(통용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 0 기후 : 고온 다습의 열대성 기후
- 0 시차 : 한국 시간 -1
- 0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0 경제 현황 : GDP(국내총생산) : 3,909억 USD * 1인당 GDP : 66,263 USD
- 0 우리나라와의 수교 일자: 1975.8.8.

2. 국방의 특징

2-1. 국방 환경

싱가포르는 지리적인 특성상 주변 국가들과 안보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군사적 위협이나 내부적인 혼란은 거의 없다. 싱가포르는 인구 약 6백만 명, 좁은 영토 기반을 가진 도시 국가로 전략적 깊이가 없다. 이러한 전략 환경을 고려하여 유사시 적이 국경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적을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방비를 GDP의 3%, 매년 전체 예산의 약 20%~25% 수준으로 편성하여 첨단 무기 구매 및 자체 연구 개발로 국방력을 강화해 왔다.

싱가포르의 또 다른 국방환경 특징은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즉, 싱가포르 국민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인식이 강하여 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은 싱가포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방비를 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그 결과 아세안(ASEAN) 국가 중 가장 먼저 군 현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

2-2. 국방 정책 / 국방 목표

싱가포르의 국방정책은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억지(deterrence)와 국방 외교(diplomacy)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1984년 총체적 국방(Total Defense) 개념을 수립해 발전시키고 있으며, 첨단과학무기로 무장한 차세대 싱가포르 군(Next Generation Singapore Armed Forces) 건설을 위한 비전 2030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다국적 안전보장체계 유지 및 지역 안보 협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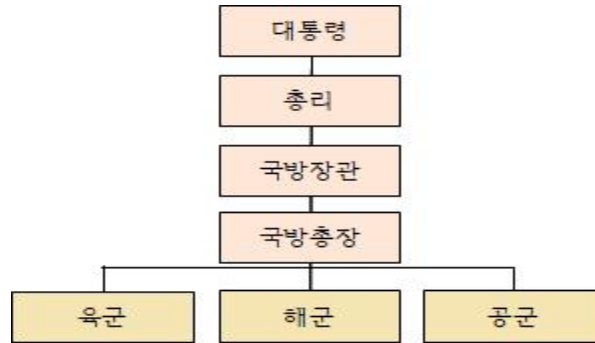
2-3. 국방 조직

2-3-1. 군 구조 유형 : 통합군 제

0 대통령 : 국가원수로서 제한된 내각 견제 행사, 총리에게 실권 위임

0 총리 :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 받은 군 최고 권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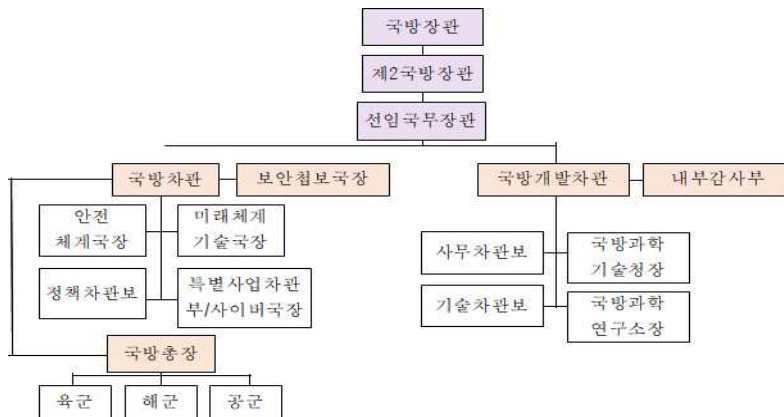
<그림 1> 군 구조



2-3-2. 국방부

- 국방 장관 : 민간 정부 관료로서 군정, 군령 통할
- 국방 총장 : 각 군에 대한 군정, 군령 권 행사
- 각 군 총장 : 국방 총장의 지휘 계통상에서 각 군 지휘

<그림 2> 국방부 기구도



2-4. 각 군 구조

2-4-1. 육군

<그림 3> 육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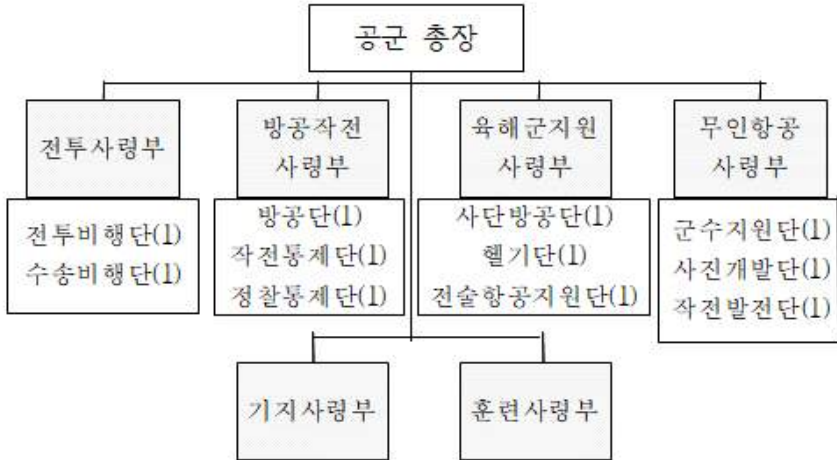
2-4-2. 해군

<그림 4> 해군 구조



2-4-3. 공군

<그림 5> 해군 구조



2-5. 군사력 현황

2-5-1. 병력 총괄

<표 1> 병력 현황

운용가능 병력(총괄)	직업군인	의무복무	상비예비군	민방위대	경찰 (해경포함)
390,600명	21,500 (여군 4,000)	39,000명	312,500명	5,600명	12,000명

0 현역 : 60,500명(육 50,000, 해 4,500, 공 6,000)

- 육군 : 직업 군인 15,000명, 의무 복무 35,000명

- 해군 : 직업 군인 3,500명, 의무 복무 1,000명

- 공군 : 직업 군인 3,000명, 의무 복부 3,000명

- 상비예비군 : 총 312,500명(육군 300,000, 해군 5,000, 공군 7,500)

2-5-2. 보유 장비(출처: Jane's Military Capabilities desk)

- 육군

<표 2> 육군 장비 현황

육군				
구분	장비명	수량	제조국	
기갑	주력 전차	Leopard 2A4SG	30	싱가포르
	주력 전차	Leopard 2A4SG Mk2	66	싱가포르
	주력 전차	Centurion Mk1	12	영국
	경전차	AMX-13SM-1	350	싱가포르
	정찰 차량	AMX-10 PAC-90	22	싱가포르
	장갑 정찰 차량	M728 CEV	8	싱가포르
	보병 전투 차량	Bionix II	200	싱가포르
	보병 전투 차량	Bionix 25	200	싱가포르
	보병 전투 차량	Bionix 40/50	300	싱가포르
	기갑부대원 수송 차량	Terrex AV-81	135	싱가포르
	기갑부대원 수송 차량	M113A2	720	미국
	기갑부대원 수송 차량	V-100/LAV-150/V-200	50	싱가포르
	기갑 전투 차량	International MaxxPro MRAP	15	미국
	평화유지군 수송 장갑 차량	Peacekeeper PRV	1	싱가포르
	상륙 기갑 차량(상륙 작전용)	AMX-10P Marines	44	싱가포르
	전 지형 가용 차량	Bv 206	300	스웨덴/싱가포르
	전 지형 무한궤도 차량	Bronco	730	미국
	경량 타격 차량	Spider	79	싱가포르
	박격포 차량	M113A1	50	미국
	장갑차량 도하 교량	Leopard 2 LEGUAN	10	독일
	장갑차량 도하 교량	MMC 30 Heavy Short Trackway Bridge	N/A	싱가포르
	장갑차량 도하 교량	Bionix	N/A	싱가포르
	장갑차량 도하 교량	M60	12	싱가포르
장갑 복구 차량	Buffel	19	독일	
Bionix 복구 차량	Bionix Recovery Vehicle	12	싱가포르	
기갑 엔지니어링 차량	Kodiak	N/A	독일	

육 군				
구 분		장비명	수량	제조국
대포	자체 추진 곡사포	155 mm Primus	54	싱가포르
	경량 곡사포	55 mm Pegasus	54	싱가포르
	차량 이동 곡사포	155 mm FH-2000	18	싱가포르
	차량 이동 곡사포	55 mm FH-88	52	싱가포르
	차량 이동 곡사포	155 mm M71S	38	이스라엘
	차량 이동 곡사포	155 mm M-68	45	이스라엘
	자체 추진 박격포	120 mm Super Rapid Advanced Mortar System	N/A	싱가포르
	박격포	160 mm M66	12	이스라엘
	박격포	120 mm Soltam	36	이스라엘
	박격포	81 mm Soltam	500	이스라엘
	박격포	60 mm Soltam/ODE	400	이스라엘
	다중발사(다연장) 로켓 시스템	227 mm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s (HIMARS).	18	미국
대전차 무기	대전차 유도 미사일	MILAN	30	프랑스
	대전차 유도 미사일	Spike-LR	N/A	이스라엘
	경 대(對)장갑 무기	Matador	N/A	남아공
	경 대(對)장갑 무기	RGW 90	N/A	독일
	로켓 발사기	Armbrust	N/A	독일
	무반동 총	84 mm Carl Gustaf	200	스웨덴
	무반동 총	106 mm M40A1	N/A	미국

- 해군

<표 3> 해군 장비 현황

해 군				
구 분	장비명	수량	제조국	
수 상 함	프리게이트(호위함)	Formidable (Project Delta)	6	프랑스 / 싱가포르
	콜베트함(소형호위함)	Victory	6	프랑스
	경비정	Fearless	11	싱가포르
	기뢰제거 함정(소해함)	Bedok (Landsort)	4	영국/싱가포르 개량
	상륙 함정	Endurance	4	싱가포르
	다목적 상륙정	23 mm Landing Craft	30	싱가포르
	다목적 상륙정	RPL Type	4	싱가포르
	상륙정	13.6 m Landing Craft	25	싱가포르
	고속 요격함	Specialised Marine Craft	3	싱가포르
	고속 요격함	14.5 m Fast Intercept Craft	6	싱가포르
	연안 경비정	14.5 m Inshore Patrol Craft	12	싱가포르
강습 돌격정	5.4 m Assault Craft	450	싱가포르	
잠 수 함	Archer 급 잠수함	Archer (Västergötland)	2	스웨덴
	Challenger 급 잠수함	Challenger (Sjöormen)	2	스웨덴
	잠수함 구조함	DSAR-6	1	영국
유도 무기	함대함 미사일	Harpoon	N/A	미국
	함대공 미사일	Simbad / Mistral	N/A	영국(BAE)
	함대공 미사일	Barak	N/A	이스라엘/ 인도
	함대함 미사일	Gabriel	N/A	이스라엘

- 공군

<표 4> 공군 장비 현황

공 군				
구 분	장비명	수량	제조국	
고정익 항공기	다기능 전투기	F-15SG Strike Eagle	32	미국
	다기능 전투기	F-16C Fighting Falcon	20	미국
	다기능 전투기	F-16D Fighting Falcon	40	미국
	공중 급유기	C-130 Hercules (KC-130B)	4	미국
	공중 급유기 / 수송기	K C - 1 3 5 R Stratotanker	4	미국
	공중 급유기 / 수송기	KC-130B Hercules	4	미국
	수송기	KC-130H Hercules	1	미국
	해상초계기 / 대 잠수함	Fokker 50MP	5	미국
	조기경보기	Gulfstream G550	4	미국
	수송기 / 정보 수집기	50UTA	4	미국
	기본 훈련기	PC-21	19	이태리
고등 훈련기	M-346 Master	12	이태리	
회전익 항공기	공격기	AH-64D Apache (Longbow)	20	미국
	수송기	CH-47D Chinook	6	미국
	수송기	CH-47SD Chinook 'Super D'	10	미국
	다 용도기	AS 332M	18	유럽/ EADS
	다 용도기	AS 332 (AS 532UL)	14	유럽/ EADS
	대 잠수함 작전용 헬기	S-70B Seahawk	6	미국
	기본훈련기	EC 120 B Colibri	5	유럽/ EADS

공 군				
구 분		장비명	수량	제조국
무인기 (UAV)	ISTAR	Heron 1	N/A	이스라엘
	정찰 / 감시	Hermes 450	5	이스라엘
	정찰 / 감시	Searcher II	40	이스라엘
유도 무기	공대공 미사일	AIM-9P-4 Sidewinder	N/A	미국
	공대공 미사일	AIM-9X Sidewinder	N/A	미국
	공대공 미사일	AIM-120C AMRAAM	N/A	미국
	공대공 미사일	AIM-7M Sparrow	N/A	미국
	공대공 미사일	Python 4	N/A	이스라엘
	공대함 미사일	AGM-154A JSOW	N/A	미국
	공대함 미사일	AGM-154C JSOW	N/A	미국
	공대함 미사일	AGM-65B Maverick	N/A	미국
	공대함 미사일	AGM-65G Maverick	N/A	미국
	대 선박 미사 일	AGM-84 Harpoon	N/A	미국
대 장갑 미사 일	AGM-114L Hellfire	N/A	미국	
방공 무기	지대공 미사일	MIM-23B I-Hawk	N/A	미국
	지대공 미사일	Spyder	N/A	이스라엘
	지대공 미사일	RBS 70	N/A	스웨덴
	지대공 미사일	Mistral	N/A	프랑스
	지대공 미사일	SA-18 'Grouse' (9K38 Igla)	N/A	러시아

2-5-3 싱가포르 국방 환경 시사점

싱가포르는 지리적 특성상 안보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보 위협 지수는 높지 않다. 그러나 싱가포르 국민들은 역사적 경험으로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인식이 강하다. 즉, 싱가포르 국민들은 오늘날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튼튼한 안보라고 믿고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이러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레 안보 의식 고취로 이어졌고, 이러한 토대는 오늘날 싱가포르 병역 제도, 예비군 제도 및 동원 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싱가포르 국방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국민들의 안보 의식 수준은 국방력 강화의 주 요소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구상은 할 수 있겠지만 추진과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3. 병역 제도

3-1. 법적 근거

싱가포르 병역 제도 법적 근거는 1970년 병역법(Enlistment Act 1970)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병역 관련 제반 업무는 국방부 예하 병무청(CMPB : Central Man Power Base)에서 담당한다.

3-2. 병무 행정

싱가포르의 병역 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징병제이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2세 남자(여성은 지원 제도)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만약 영주권자 2세가 병역기피 시 영주권 취소 등 체류 불이익을 준다. 또한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취득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 복무기간은 2년이고, 복무 방법은 군, 경찰, 소방대 등에서 동일 기간 근무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군(軍) 및 병과(직별)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권이 없고, 신체 및 적성검사, 스펙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8단계로 분류한 기준에 의거 배정한다.

기초 군사훈련 종류 및 기간은 병과(직별)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3개월이다. 그러나 입대시 체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4개월, 비만자인 경우는 6개월로 연장된다(기초 군사훈련이 연장되면 복무기간도 동일 기간 연장됨).

훈련병 급여는 630 싱가포르 달러(약 63만원)정도이고 병장 급여는 730 싱가포르 달러(약 69만원)이지만 통상 기타 수당 포함 약 1000 싱가포르 달러(약 95만원) 정도를 받는다.

3-3. 병역 자원 관리

싱가포르의 모든 병역 의무 대상자는 만 16.5세가 될 때 병역 의무 등록(입영 관련 등록)을 해야 하며, 만 13세 이상 모든 남자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출국 허가증(EP: Exit Permit)을 발급 받아야 한다. 현역병은 고등학교 졸업시기인 18세(또는 19세)에 필수적으로 군에 입대해야하며, 대학 진학 및 해외 유학 등은 의무 복무 후 가능하다. 군 입대 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고 병역 기피자는 징역형을 받으며 또한 공무원 지원 자격도 박탈된다.

싱가포르 장교 및 사병들은 복무를 마친 후 장교는 50세, 나머지 계급은 40세까지 예비군으로 복무해야 한다. 참고로, 싱가포르 직업 군인 정년은 장교 50세, 부사관 55세, ME(Military Expert / 의무, 공병, 군수, 정보 등)는 60세(희망시 연장 가능)이다.

3-4. 싱가포르 병역 제도 시사점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동일한 징병제이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MZ 세대들의 의무 복무에 대한 인식은 양국 모두 별 차이가 없다. 즉, 양국의 MZ세대들은 의무 복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역 제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는 병역 연기를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18세(또는 19세)가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입대해야하며 대학 진학 및 해외 유학 등은 의무 복무 후 가능하다. 즉, 싱가포르의 공정하고 확고한 집행은 의무복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 복무자들에 대한 복지도 차이가 있다. 단순 복지(급여, 휴가), 전역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전역 후 주택지원, 연금, 세금 감면, 기타 정부지원금 등의 별도 혜택을 주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는 국방개혁 일환으로 개별 전문성(스펙, 적성 등)을 군 및 병과(직별) 배정에 반영하고, 군 복무기간에 수행하는 업무들이 제대 후 사회 직업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4. 예비전력 현황 및 동향 분석

4-1 예비군 제도(상비 예비군 제도, ORNS : Operational Ready National Service)

싱가포르의 예비군 제도는 상비예비군 제도(ORNS : Operational Ready National Service)이다. 1980년 이전까지는 예비군들은 현역을 지원하는 개념이었으나 이후 개념을 바꾸어 현역(정규군)과 함께 작전에 투입되는 상비 예비군제도를 정착시켰다. 이에 따라 예비군 장비도 신형 장비로 교체하고 훈련 또한 강도 높게 실시하여 현역 수준에 달하는 전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예비군들이 상시작전 태세 유지 가능토록 법적,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사회적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다.

4-2. 일반 사항

싱가포르의 병역 대상자는 2년간 군 복무 후 10년간 상시 동원 가능한 상비 예비군 신분을 유지한다. 병의 경우, 10년간 대대단위로 소속과 보직이 고정되고, 간부도 진급 등 사유로 소속과 보직이 유동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소속과 보직이 고정된다. 예비군 종료 연령은 장교 50세, 사병 40세이며, 훈련일수는 연 6-14일(법정 최대 40일 가능), 해외 훈련 참가시 연간 21일 훈련을 실시한다.

4-3. 지휘 체계 및 교육 훈련

싱가포르는 국방부 예비군 국(Reservist Affairs Division, RAD)에서 모집하고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지방사령부(Local Area Command, LAC)는 국방부의 지침을 받아 지역 예비군들을 관리한다.

예비군들의 부대 배치는 개인의 교육 수준, 신체조건, 군의 작전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예비군 훈련은 현역 시절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사시 동원될 경우 현역시절과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만약, 예비군이 일정 수준의 전투력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훈련 지휘관은 추가적인 훈련 소집을 할 수도 있다.(MUT: Make-up Training).

훈련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훈련을 실시한다. 1~4년차(강화 단계)에는 기본 전술(개인/팀),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마지막 4년차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5~7년차(정예화 단계)에서는 부대 전술 숙달 위주로 실시하고 마지막 7년차에 부대 훈련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8~10년차(수준 유지 단계)에는 상시 작전 태세 유지 및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숙달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일수는 1~3년차에는 연간 6일 동안 Low Key 훈련(중대 급 이하 전술 훈련 숙달)을 실시한다(훈련 성과에 따라 지휘관이 훈련 일수를 최대 4일까지 단축 가능하다). 4년차부터는 연간 14일 동안 High Key 훈련(대대 급 전술 훈련 숙달)을 실시한다. 훈련주기는 5년이다.

싱가포르는 아래와 같이 7개의 예비군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훈련 기관은 1개 대대 훈련 지원 가능한 숙영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표 5> 싱가포르 예비군 훈련기관 현황

구분	훈련소 명칭
예비군 훈련 기관	기갑 훈련소 (ATI: Armour Training Institute)
	군수 훈련소 (ALTI: Army Logistics Training Institute)
	포병 훈련소 (AI: Artillery Institute)
	지휘자(관) 훈련소 (CTI: Commando Training Institute)
	공병 훈련소 (ETI: Engineer Training Institute)
	보병 훈련소 (ITI: Infantry Training Institute)
	통신 훈련소 (SI: Signal Institute)

4-4. 예비군 관리

싱가포르 국방부는 상시작전태세 유지를 위해 예비군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 예비군들의 훈련 불참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신입 사원 또는 창업, 결혼 및 신혼여행, 기타 출산, 심각한 병, 가족의 상 등을 당했을 경우 본인이 예비군 포털

에서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 등을 전송(upload) 하여 신청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훈련 연기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훈련 요구 사항, 숙달 정도, 이전 참여 기록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에 대한 유예 또는 예외가 없으며 단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학업을 진행하는 3년 동안은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경우 병적부에 해당 사항이 기록되며 징계(벌금, 구금 등)를 받게 된다(경우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싱가포르는 예비군들의 해외 출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통제를 한다. 대상자는 해외여행을 위해서 출국 전 반드시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해당 부대는 6개월 전에 개인에게 훈련일정을 통보하고, 개인은 고용주에게 사전 훈련 일정 고지 의무가 있다.

모든 예비군들은 해외 체류시(14일 이상-12개월 미만 / 2023.4월부터) 국방부의 소집(recall)에 즉각 응신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방문국, 방문기간, 연락처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만일 예비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는 경고장, 두 번째부터는 고의로 판단하여 벌금(최대 2,000 달러 / 한화 약 1백70만원) 및 재판에 넘겨져 여권이 무효화되기도 한다. 특히, 12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에는 출국 허가(Exit Permit)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은 최대 10,000달러(한화 약 8백50만원)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 진다.

싱가포르 국방부는 예비군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365일 24시간 국방부 신고 센터(MNC: MINDEF Notifica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문자, 유선 전화,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이 가능토록 준비 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예비군들에게 엄격한 규율도 적용한다. 우선, 군복 및 장비는 훈련 기간 또는 군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착용 및 소지 가능하고, 만약 분실이나 훼손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훈련 소집시는 반드시 규정에 맞게 두발을 정리하고 입소해야하며, 예비군으로서 군에 대한 군사기밀을 누설해서도 안 된다.

4-5. 처우 및 보상

싱가포르 예비군 보수는 동원예비군 훈련 참가 일수만큼 회사 책정 보수액을 국방부에서 지급한다(해당 회사에 대한 지원책도 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예비군들의 건강, 복지에 대한 책임도 진다(각종 정책이 수립 되어 있다)

예비군 수당은 근무 수당(Service Pay)과 보상 수당(Make-up Pay)으로 나누어 진다. 근무 수당의 경우, 계급과 직책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며 훈련 일수(주말 및 공휴일 포함 모두)만큼 지급 한다. 또한 시간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 절(4시간) 훈련했을 경우에도 지급한다(세부 수당 액은 '해당 계급 현역 월급 × 훈

련일 수')

보상 수당은 예비군이 사회에서 받는 봉급과의 격차를 보상하기 위한 수당이다. 즉,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사회에서 받는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훈련 종료 수당(예비군 훈련을 완전히 마쳤을 경우 지급) 300달러가 지급되며, 위험 직위 수당(다이빙, 강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지급한다.

체력 등급별 수당도 지급되는데, 이는 유사시 예비군들의 전투력 보장의 일환으로 1년에 한번 체력 검사(IPPT: Individual Physical Proficiency Test)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한다.

※ Gold(상) : 500 싱 달러(약 430,000원), Silver(중) : 300 싱 달러(약 260,000원), Pass with Incentives(하) : 200 싱 달러(약 170,000원), Pass(단순 통과) : 없음

체력 검사를 위해 사전 여건 보장(체력검사 준비 센터 4개소 운영), 체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체력 보충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체력 검사나 보충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병적부에 기록되며 징계(벌금, 구금 등)를 받는다(경우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예비군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보험(사망, 중대 장애에 대한 보상, 70세 까지) 가입이 되며, 본인이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자녀(아들: 18세까지, 딸: 25세까지)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예비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지는데 예비군의 경우 1년에 1,500싱 달러(한화 약 1백3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예비군의 부모와 배우자의 경우, 싱가포르 시민권자임을 전제로 1년에 750 싱 달러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도 E-learning 수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즉, 학술적 강의, 자격증 강의, 기술관련 강의 등 수강할 때에는 원격 강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예비군에 대한 의료 지원도 하고 있다. 훈련기간(ICT: In Camp Training)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 의료 지원(치과 포함)을 하고 있으며, 훈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군 복지 시설(국내·외 리조트 등)도 이용 가능하며, 국방부 주관 각종 행사에도 초청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위 모든 인센티브는 모든 예비군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비군으로서 지켜야할 규정을 준수하고, 갖추어야할 기본 체력을 유지하고, 정해진 훈련을 완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6. 싱가포르 예비군 제도 시사점

싱가포르는 예비군도 의무라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모든 사회제도가 예비군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사회적 제도화가 되어 있다) 예비군 관리 및 훈련도 시스템화 되어 있어 효과적,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가 가능하여 유사시 곧바로 현역과 함께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처우 및 보상은 軍 장기복무자와 유사하여 사기가 높다.

5. 동원 제도

5-1. 법적 근거

싱가포르 동원 제도의 법적 근거는 1970 싱가포르 병역법(Enlistment Act 1970) PART IV. MOBILISED SERVICE(동원 업무)이다. 요지는, 대통령에게 동원 선포의 권한을 부여하고, 관할 당국의 명령으로 동원된 자들은 동원 해체 시까지 동원된 기관, 장소에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2. 동원 업무 조직 및 관리

<표 6> 동원 업무 조직

구분	동원업무 수행 부서	관리자(직급)
MINDEF (국방부)	NSPD (National Service Policy Department)	민간(군무원)
SAF (합참)	NSD (National Service Department)	준장 급 참모
ARMY (육군)	- NS Affairs Department - CSSCOM(전투군무지원 사령부)	대령 급
DIVISION (사단)	일반참모부(G-8)	중령 급 참모
BRIGADE (여단)	일반참모부(S-8)	소령 급 참모

5-3. 인원 동원

싱가포르의 인원 동원은 총 동원과 부분 동원으로 구분된다. 인원 동원은 6개월 전에 e Mobilization 알림 시스템을 통해 훈련 배치 및 날짜를 통보하여 고용주에게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해당자는 Manning 알림을 받으면 예비군 포털 사이트, SMS, 방송응답시스템 중 하나를 통해 받았다는 응신(승낙)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동원 훈련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및 가족, 고용주의 지원이 필요하다.

동원 방법은 공개 동원과 비공개 동원으로 구분되며, 공개 동원은 TV, 라디오 등

의 매스 미디어, 유선 전화(가정, 사무실),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직접 및 간접으로 통보 한다. 동원 완료는 14시간 소요된다. 비공개 동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연락, 특정 조직 또는 비공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원 완료는 12시간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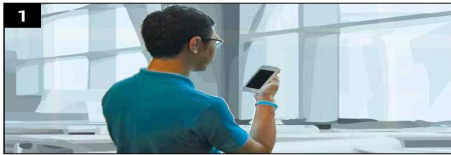
동원령 선포 절차는, 국방부 장관(필요시 내무부 장관)이 총리에게 건의하고 총리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국방부 장관 건의 → 총리 건의 → 대통령 재가) 동원령 응소 절차는 시스템화 되어 있다.

그 절차는 One-Stop MEC(Mobilisation & Equipping Processes)와 같다 [① 소집명령 전파(전화, 방송 매체 등) → ② 등록(신분 확인) → ③ 장비 및 물자 지급 → ④ 탄약지급 → ⑤ 작전계획 교육(주요 직위자) → ⑥ 임무수행]

<그림 6> One-Stop 동원응소 절차

ENHANCED ONE-STOP MOBILISATION & EQUIPPING PROCESSES

The Mobilisation and Equipping Centre (MEC) in Selarang Camp houses everything that an NS unit needs to be ready for operations within hours of being recalled.



1 1SG (NS) Lai Zho Beng, 28, receives a message telling him that he has been mobilised and is to report back to his unit. He is part of an infantry unit.



2 He arrives at the MEC, where he scans his identity card at the Self-service kiosk and receives a slip that lists the equipment and weapon he is required to draw.



3 He draws his organic weapon and proceeds to the training station where he refreshes his drills in handling the weapon.



4 Ammunition is delivered by the SAF Ammunition Command and subsequently distributed to the NSmen. At the MEC, vehicles are kept at the storage facility within a Controlled Humidity Environment, which ensures the vehicles can move out at any time.



5 1SG (NS) Lai then attends the mission-planning brief for commanders while his men undergo refresher training such as basic first aid and chemical defence drills.



6 After completing all stations, 1SG (NS) Lai is out-processed. In all, he has spent just under five hours in the MEC, as compared to the 10-12 hours in the past.

ENHANCED ONE-STOP MEC

Completed in 2017, the MEC is a multi-storey complex that centralises the equipping process for NSmen.

DIGITALISATION

- Self-service kiosk
- Customised equipping based on NSman's appointment

CONTROLLED HUMIDITY ENVIRONMENT

- Vehicles and equipment are maintained at optimal serviceability

GREEN TECH

- Use of renewable energy
- Light intensity controls and motion light sensors
- Water filtration system to recycle used water



5-4. 물자 동원

싱가포르의 물자 동원은 동원 상황에 따라 물자 규모나 종류가 다르다. 일반적인 동원 훈련 시 동원 물자는 MEC(Mobilization and Equipping Center, 동원 센터)로 집결 된다. MEC 용도는, 전시용 장비·물자 보관(전차, 화포, 탄약, 개인화기, 전투 물자 등)하며, 여단 급 부대에 1개 MEC 있다. MEC의 총 바닥 면적은 147,020㎡ (축구장 22개 규모)이다.

싱가포르의 물자 동원은 가능한 최 단시간에 동원 가능토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물자 불출 시간은 5시간 이내로 단축되었다(과거 MEC 구축 전에는 10~12시간 소요)

5-5. 싱가포르 동원 제도 시사점

싱가포르의 동원 제도 특징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인원 및 물자 동원 대상자들이 각자의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물자 동원을 위한 MEC는 구축으로 물자 불출 시간을 과거보다 훨씬 단축시켰다(과거의 1/2)

또한 방산 업체들의 동원 체계는 아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방산 중소기업들은 평소에도 싱가포르의 실질적 국영 기업인 최대 방산기업 ST Engineering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동원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6. 예비 전력 관련 미래 동향 분석

6-1. 해외 훈련기지 건설

싱가포르 국내 훈련장은 첨단기술이 접목된 선진화된 시설이지만, 요구되는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로 제한되는 훈련장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 호주에 훈련 기지를 건설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추가로 호주 Townsville에 싱가포르 국내 훈련장 10배 규모의 대대급 이상 제대의 종합 전술 훈련이 가능한 다목적훈련장(Multi Mission Range Center)을 2025년까지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 해외 훈련기지는 호주 외에, 미국에 공군 훈련기지(아칸소 주 Ebbing 공군기지에 F-35B 및 F-16 전투기 훈련 파견대 파견), 독일, 뉴질랜드, 대만에 육군 훈련기지가 있다.

6-2. 『가칭』 싱가포르 신(新) 개념 예비 전력

6-2-1. 토탈 디펜스(Total Defense, 총체적 국방)

싱가포르의 총체적 국방(Total Defense)은 군사, 민간, 경제, 사회, 정신적 방어

등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동원하고 융합해 국가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한다는 목적으로 1984년 개념이 수립돼 정부기관들과 협업을 해왔고,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념에서 행동’으로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총체적 국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싱가포르 심리방어(Psychological Defense) 구축을 위해 청년층이 참여하는 국가청년위원회(NYC)와도 협업하고 있다(유사시 국민적 동참 필요성 인식 제고)

6-2-2. 도시의 수호자 게임 프로그램 배포

싱가포르는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모든 중학교에 ‘도시의 수호자(Guardians of the City)’란 전략 카드 게임을 배포, 교육하고 있다(단순 테러 위협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전장 환경인 도심 작전과도 무관하지 않아 전쟁 개념 인식 제고 효과)

6-2-3. 공군 예비 활주로

싱가포르는 고속도로를 전시 예비 활주로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했다. 현재 창이 공항에서 마리나 베이 간 고속도로 및 북서쪽 지역 고속도로 1개 구간이 전시 예비 활주로로 활용 가능토록 건설되었다(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이동식 대형 화분으로 배치)

6-2-4.3 『가칭』 싱가포르 신(新) 개념 예비 전력 시사점

전시 정규군과 예비군 외에 국가의 총체적 전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싱가포르의 『가칭』 신(新) 개념 예비 전력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가칭』 신(新) 개념 유사 예비 전력 활약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되었다. 민간인 드론 동호회, 사이버 전 전문가, 해킹 전문가,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들의 지원 활동이 전쟁에 어떤 결과를 미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 저자소개



이종철 / 한국국방외교협회 사무총장, 해사 38기, 예)대령.
주요 경력은 주싱가포르 국방무관, 해본 국제연락과장, 해본 행정과장, 호위함 함장, 특수전 전단 작전참모 등 역임하였고, 전역 후에는 대덕대학교 군사학부 초빙교수를 역임하였음. 현재는 국방외교협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협회에서 발간하는 주간안보군사정세 집필진(아시아 대양주 담당)으로 활동 중임.

프랑스

박한빈(前 주프랑스 국방무관)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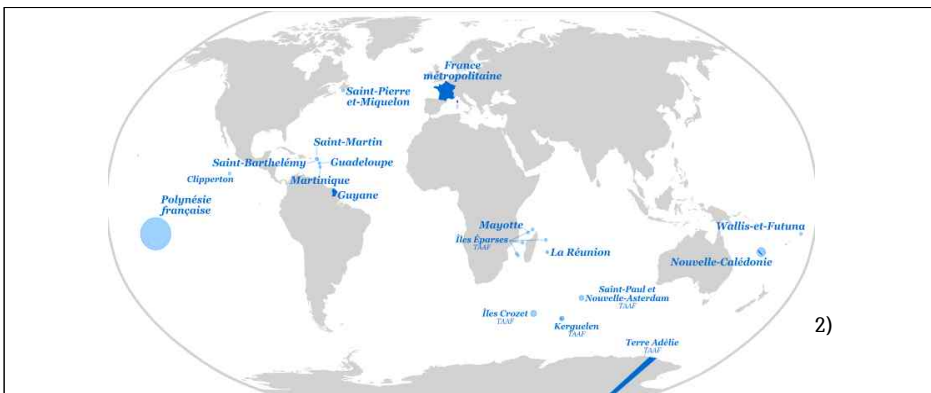
<도표 1. 프랑스 국가 개요 ('23년도 기준)>¹⁾

1€ = 1.1\$ 적용

인구	GDP	1인당 GDP	국방예산 (GDP 대비)	예비전력예산 (국방예산 대비)
66,218,000	3조 23억\$	43,880\$	483억\$ (1.91%)	산정 제한

- 프랑스의 **예비역/추모 예산**과 **군인연금**은 **국방예산에 미포함**
- **군경찰(10.2만명)** 및 **일부 공병(1.25만명)** 인력 및 예산도 **국방비 미포함**

<그림 1. 지정학적 위치>



- 국명: 프랑스 공화국(République française)
- 면적: 675,417km² (해외 영토 123,148km² 포함, 한반도의 3.1배)
- 화폐단위: 유로
- 종족: 켈트족, 프랑크족 등
- 언어: 프랑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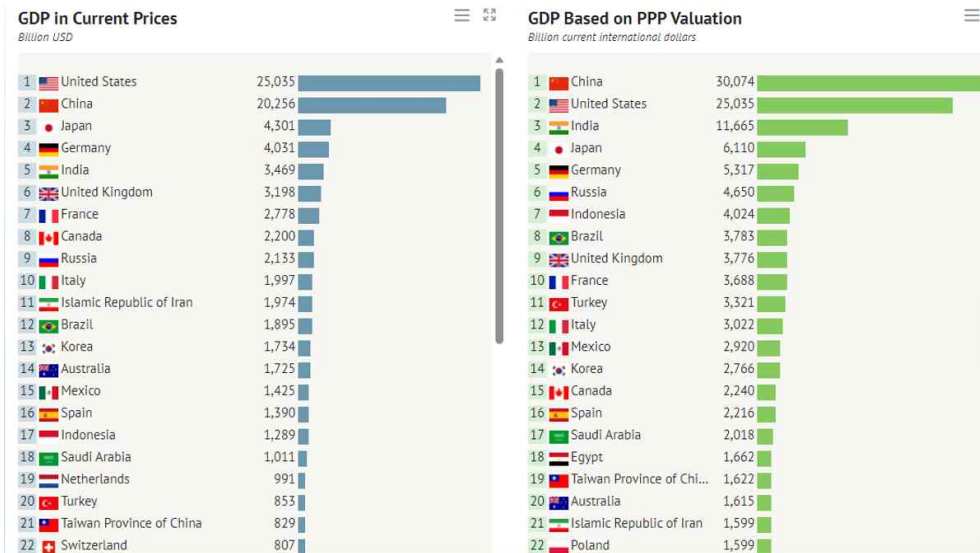
1) <https://www.britannica.com/facts/France> 검색일 2023.5.10

2) https://fr.wikipedia.org/wiki/France_d%27outre-mer#/media/Fichier:France_Ove

1-1. 경제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과 함께 선진국 대열의 경제대국이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 5위 안에 머물렀으나,³⁾ 2023년 기준 프랑스의 명목상 GDP는 세계 7위이며, 구매력을 반영한 GDP 순위는 세계 10위로 평가된다.⁴⁾

<그림 2. 세계 GDP 순위>



※ 출처: KNOEMA(IMF의 세계 경제 전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

2027년 세계 경제 전망치에 의하면 프랑스의 명목상 GDP 순위는 여전히 7위를 유지하지만 프랑스를 앞서는 국가들과의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국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영국이나 독일의 성장 비율도 프랑스보다 높아 프랑스의 경제적 위상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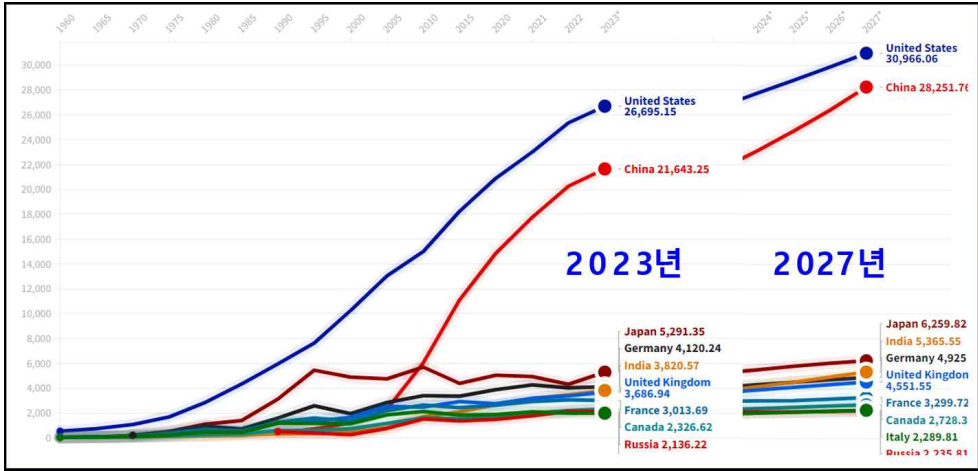
rseas.svg

3) [List of countries by largest historical GDP - Wikipedia](#) 검색일 2023.5.17

4) <https://knoema.com/nwnfkne/world-gdp-ranking-2022-gdp-by-country-data-and-charts> 검색일 2023.5.16.

5) <https://countrycassette.com/gdp-by-country-2023-live/> 검색일 2023.5.16.

<그림 3. 세계 GDP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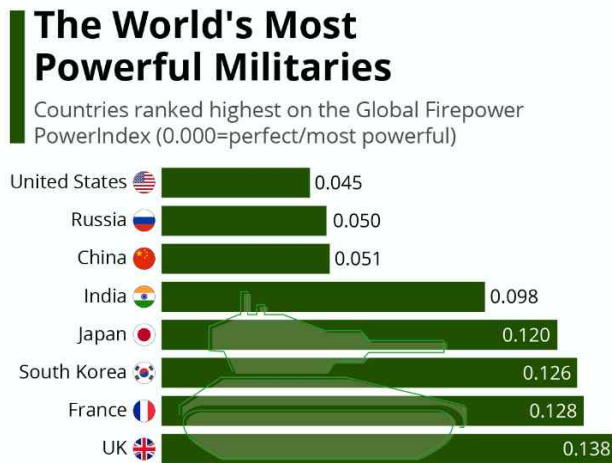


※ 출처: Country Cassette Data Portal(다양한 지표 기반 실시간 데이터)

1-2. 안보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핵보유국이며, 핵추진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어서 안보 및 군사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대국이다.⁶⁾ 하지만 세계 최강 군사국 선정 기준에 의하면 **프랑스의 종합적인 군사력은 한국 다음으로 세계 7위로** 나타났다.⁷⁾

<그림 4. 세계 최강 군사력 국가>



6) <https://www.statista.com/chart/20418/most-powerful-militaries/> 검색일 2023.5.16.

7) <https://www.statista.com/chart/20418/most-powerful-militaries/> 검색일 2023.5.16.

2. 국방의 특징

2-1. 경제적 관점

프랑스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한때 선진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었지만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감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상한선인 GDP 대비 3% 미만으로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방비도 이에 큰 영향을 받아 **프랑스의 국방비 투자가 현저히 증대될 전망은 크지 않다. 프랑스의 국방비 규모는 한국보다 바로 앞선 세계 8위 수준이다.**

<그림 5. 프랑스 정부 부채>8)

프랑스	마지막	이전	단위	참고
GDP 대비 정부 부채	111.60	112.90	GDP 비율	Dec 2022
정부 예산	-4.70	-6.50	GDP 비율	Dec 2022
정부 지출	144089.00	144415.00	EUR - 백만	Mar 2023
정부 부채	2956.80	2916.80	EUR - 억	Sep 2022

<그림 6. 국가별 방위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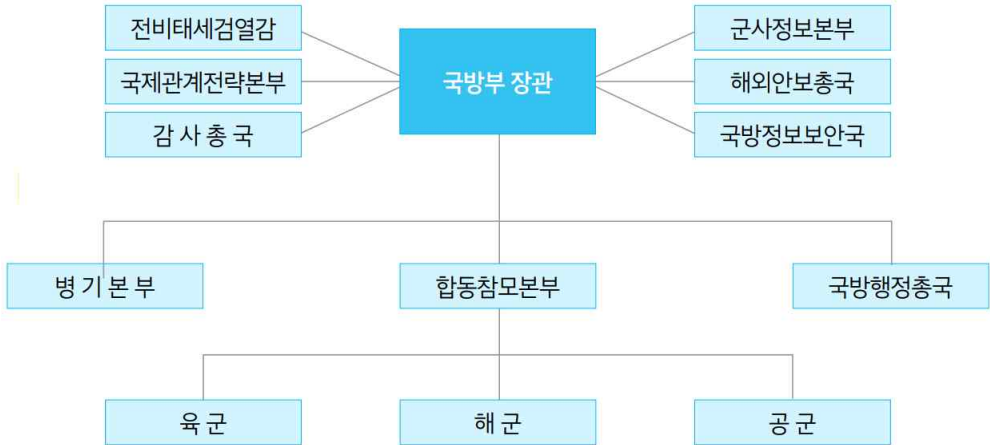
2023 Fact Sheet (for 2022) ^[1]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5]				
Rank ↕	Country ↕	Spending (US\$ bn) ↕	% of GDP ↕	% of global spending ↕
	World total	2,240	2.2	100%
1	United States	877.0	3.5	39%
2	China ^[a]	292.0	1.6	13%
3	Russia	86.4	4.1	3.9%
4	India	81.4	2.4	3.6%
5	Saudi Arabia ^{[a][b]}	75.0	7.4	3.3%
6	United Kingdom	68.5	2.2	3.1%
7	Germany	55.8	1.4	2.5%
8	France ^[c]	53.6	1.9	2.4%
9	South Korea	46.4	2.7	2.1%
10	Japan	46.0	1.1	2.1%
11	Ukraine	44.0	34	2.0%
12	Italy	33.5	1.7	1.5%
13	Australia	32.3	1.9	1.4%
14	Canada	26.9	1.2	1.2%
15	Israel	23.4	4.5	1.0%

8) 프랑스 - GDP 대비 정부 부채 | 1980-2022 데이터 | 2023-2025 예상 (tradingeconomics.com) 검색일 2023.5.16.

프랑스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유럽연합 내에서의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나토의 통합군사지휘체계에서 이탈하였다가 복귀하였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 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2-2. 군사조직

<그림 7. 국방부 조직>



프랑스군의 2023년 정원은 민간인 62,000명을 포함하여 총 273,000명이다. 이 중에 3,000명이 동원된 예비군이다. 프랑스는 별도의 예비군 부대를 보유하지 않고 예비군은 현역 전력을 보강할 목적으로 현역 군부대에 보직된다.

<그림 8. 군사력 규모>



프랑스는 군대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정원의 10% 이상을 신규 임용한다. 2023년에는 민간인 5,600명을 포함하여 총 29,700명이 임용되었다. 프랑스는, 2015년 파리 및 외곽지역에서 동시다발적 테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 군 정원을 6년간 총 6,000명 상향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2023년에는 정보, 사이버, 작전부대, 수출지원 분야에 1,500명이 증원되었다.

<그림 9. 프랑스군 2023년 신규 임용>



2-3. 국방부 외 군사조직

프랑스는 국내 치안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협조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 프랑스군은 특히 치안과 구호 분야에서 프랑스군을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 지휘하에 운용되도록 협조하고 있다. 병력도 예산도 타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2-3-1. 군경찰

프랑스 군경찰은 2009년 8월에 국방부 소속에서 내무부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프랑스 국내 치안을 내무부가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프랑스 국내 치안은 국립경찰 및 군경찰에 의해 이루어진다.

프랑스 국립 경찰(Police Nationale)은 경찰 14만명 규모로 인구 2만 이상 도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데, 이는 전 국토의 5%, 총 인구의 50%에 해당한다. 반면에 국립 군경찰(Gendarmerie Nationale)은 102,000명 규모로 도시 주변과 농어촌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데, 이는 전 국토의 95%, 총 인구의 50%에 해당한다. 전 국토의 95%에서 위기에 처한 시민을 구하는 것은 군경찰이다. 국민의 군에 대한 존경, 인정, 사랑의 근원점이다.

프랑스 군경찰은 국립 경찰과 달리 군사교육을 받고, 군과 동일한 지휘통제체계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유사시 군과 즉각적인 제병협동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 군경찰 장교는 佛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 합동참모대학, 국방대학원 등 군과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다. 프랑스 군경찰은 군인의 전통, 자부심, 신분을 유지하나 군 정원 및 예산에서는 제외되고 내무부에 편성된다.

프랑스 국내 치안을 위해 군경찰과 국립 경찰외에 일부 지자체에 의해 자치경찰도 운용된다. 자치 경찰(Police Municipale)은 각 기초자치단체(Commune)의 장이 자체 예산으로 설치, 운영한다.

2-3-2. 공병대

프랑스 군경찰이 내무부에 소속되어 국내 치안을 담당하듯이, 일부 프랑스군 공병대는 내무부 및 지자체에 소속되어 이들의 정원과 예산을 사용하여 소방 및 구호 활동을 수행한다.

파리 육군 공병 여단(Brigade de Sapeurs-Pompiers de Paris)은 8,550명 규모로 파리 경찰국에 소속되어 파리, 귀안, 핵시험장 등에서 소방, 구호, 안전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마르세유 해군 공병대(le Bataillon de Marins-Pompiers de Marseille)는 2,400명 규모로 마르세유 시장의 직속 기관으로 활동한다. 프랑스 제1, 제2의 도시 소방, 구호, 안전을 군인이 담당한다. 프랑스 군대는 국민 속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 마르세유 해군 공병대의 군 조직원 중 68%는 계약직이다.

위 두 공병대가 특정 지자체에 소속되어 소방 및 구호활동을 하는 반면에, 민간 안전 지원 구호대(Les unités d'instruction et d'intervention de la sécurité civile)는 1,500명 규모로 내무부에 소속되어 전국을 대상으로 화재 구호 전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프랑스군은, 1984년 이후 주로 6월~9월에 집중되는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병대로 구성된 산불진화 전담부대를 운용한다.

2-3-3. 프랑스 방위군⁹⁾

프랑스 방위군(Garde Nationale)은 프랑스 혁명(1789) 당시 최초로 창설된 후 1871년 해체되었다가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2016년 재창설되었다.¹⁰⁾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은 국방부(각 군 참모총장) 및 내무부(군경찰 참모총장 및 경찰총장) 대표들로 구성된 방위군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최소 연1회 회의를 개최한다.

프랑스 방위군은 프랑스군, 군경찰, 경찰 예비군 총 77,000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상시 7,000명이 근무하며, 군경찰 소장 신분의 방위군 사무총장이 지휘한다.¹¹⁾ 방위군은, 국내 치안, 주로 대테러 경계 작전을 수행한다.

<도표2. 프랑스 내 테러 현황>

- **거의 매년 여러 건 테러 발생**
 - 1972~2021년 간 총 2,979건 발생, 448명 사망, 1,779명 부상¹²⁾
- **2015.1.7.~9. 알카에다(아라비아 반도 지부) 파리/근교 4곳 테러**
 - 1.7 이슬람 극단주의자 3명 파리 외곽 '샤를리 에브도' 주간지 사무실에서 총기 난사해 기자 등 12명 사망.
 - 1.8 범인 중 1명이 파리 남부 몽루즈에서 자동차총을 난사하여 여성 경찰관 1명 살해.
 - 1.9 파리 동부 유대 식료품점에서 인질 4명 사망. 범인 3명 사살.
- **2015.11 IS 파리/근교 7건 테러**
 - IS 7건 (소총 및 자살 폭탄) 테러 자행, 130명 사망 416명 부상
 -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 이후 최대 규모

9) <https://garde-nationale.gouv.fr/la-garde-nationale> 검색일 2023.4.22.

10)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Guard_\(France\)](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Guard_(France)) 검색일 2023.4.22.

11) 예비군은 국방부 및 내무부 소속으로 방위군 및 각 군에서 근무한다.

2-3-4. 대테러 경계 작전

프랑스군은 방위군과 함께 대테러 경계 작전(Opération Sentinelle)으로 테러 예방과 대응 등 국내 치안을 지원한다. 이 작전에는 상시 작전 참여 전력 3,000명, 증원 전력(12시간 및 72시간 내 투입 가능, 부대 대기) 4,000명, 전략 예비군(réserve stratégique) 3,000명 총 10,000명이 편성된다.¹³⁾

3. 프랑스 국방정책

3-1. '국방백서

프랑스는 1972년 최초로 발간 한 후 2013년까지 국방백서 혹은 국가 전략서라는 명칭으로 국방정책에 대한 최상위 문건을 다음과 같이 7회 발간하였다.¹⁴⁾

- 1972년 국방백서(Livre blanc sur la défense nationale)
 - 중립 천명, 핵 3축 완성,¹⁵⁾ 전 남성 의무 국가복무(1년), 국민 저항군
 - 방어·저항 의지는 (전체와) 각자의 결단과 참여를 통해서만 발휘
- 1994년 국방백서(Livre blanc sur la défense)
 - 1991년 냉전 종식을 배경으로 작성, 국경 침략 위협 없다고 평가
 - 군/예비군 대규모 감축, 의무 국가복무(10개월) 폐지, 직업군인제 도입
- 2008.6 국방안보백서(Défense et Sécurité nationale Le Livre blanc)
 - 2001년 9.11 테러를 반영하여 작성
 - 국가 안보와 국방과의 경계가 없다는 교훈에 근거
- 2013.4월 국방안보백서(Livre Blanc Défense et Sécurité Nationale)
 - 사이버 테러 확산을 반영하여 작성
- 2017. 국방안보전략서(Revue Stratégiqu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Nationale)
 - 프랑스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사건 후 작성
 -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동부지역 점령 사안 반영
 -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 및 고강도 전쟁 회기에 대한 대비 강조
- 2021. 전략서 최신화(Actualisation Stratégique)
 - COVID-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전시 경제체제 필요 인식

12)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terrorist_incidents_in_France 검색일 2023. 4.22.

13) https://fr.wikipedia.org/wiki/Op%C3%A9ration_Sentinelle#Cour_des_comptes2022 검색일 2023.5.12

14) La politique de défense au travers des lois de programmation militaire | vie-publique.fr

15) 프랑스는 알제리 사막에서 1960년 2월에 핵폭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2022. 국가전략서(Revue Nationale Stratégique)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유럽 내 고강도 전쟁 위협 증대
- 하이브리드 전장에서 대응 능력 강화 강조
- 다영역 다지역 작전능력 강화 필요성 제기

☞ 이후부터 본보고서에서는 상기 문건을 모두 국방백서라 칭한다.

프랑스 국방백서는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국방정책과 전략을 제시한다. 국방백서에서 제시된 정책 및 전략은 ‘군사 계획법’에 반영된다. 국방백서는 주로 전투력 운용 전략과 방위 산업 전략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국제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전략 수정과 전력증강 소요가 증대되어 기존 ‘군사 계획법’의 수정을 위해 ‘국방백서’ 발간 주기가 단축되고 있다.

최근까지 백서는 주로 군 감축을 요구하였다.¹⁶⁾ 1994년에는 440,000명, 2008년 271,000명, 2013년 225,000명, 2017년 200,000명으로 병력 축소를 지향하였다. 이는 냉전 종식과 프랑스 재정 악화 사정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3-2. ‘군사 계획법(la 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

3-2-1. 기원

프랑스는 드골의 제5공화국 초기 1957년부터 군사 계획법 제도를 도입하여 향후 4~7년 주기 군사 기획을 법과 예산으로 보장하였다. 프랑스 제5 공화국의 1960년 첫 군사 계획법은 핵 억지력 시행을 위해 제정되었다.

군사 계획법은 전력 획득 분야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 배치, 유지 정비, 성능개량, 도태 전 과정이 보장되었다. 군은 군사 계획법을 통해 요구 능력을 병기본부가 정확히 이해하도록 표현하였고, 병기본부는 무기체계 제원·성능을 산업계 구현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그래서 군(정부), 국회(국민), 산업계(재계) 모두 협조적·통합적으로 무기체계 개발 목표를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군사 계획법은 2,000년대 초반부터는 병력, 복지, 지원 등 전 군사 분야를 망라하였다. 군사 계획법은 매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상 요구와 (투자, 개발, 획득에 관한) 장기적 책무를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안보정세 및 위협 평가, 국방정책·전략 방향 제시, 자원 할당 가시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다양한 기관과 집단 간 예측, 의사소통, 협조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문에서는 냉전 이후 큰 군구조 변화를 유

16) <https://bertrandpauvert.fr/2023/04/05/1972-2013-40-ans-de-livres-blancs/> 검색일 2023.5.15., 동 자료가 제시하는 수치는 타 자료와 차이가 있어 추후 검증이 필요함. 다만 국방백서들이 일관성있게 전력 축소를 요구한다는 관점을 동 자료로 인용함.

발한 군사 계획법들에 대해 살펴본다.

3-2-2. '1995-2000 군사 계획법'

- 1994년에 발간된 두 번째 국방백서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
 - 핵 억제력을 조정하고, 신안보 환경에 맞는 재래 전력의 역할 정의
 -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정의, 1996년에 직업군인제 도입하도록 결정
- 병력을 606,000명에서 579,500명으로 감축, 전력 투자비는 연 0.5%씩 증액할 것을 계획
- 총리가 신 군사 계획법 준비를 요구하여, 1995년에 중단

3-2-3. '1997-2002 군사 계획법'

- '2015년 군 모델(modèle d'armée 2015)'을 완성하기 위한 세 개의 '군사 계획법' 중 첫 번째 군사 계획법
- 직업군인제, 방위 산업 재구조화, 군 장비 현대화, EU와 NATO를 기반으로 하는 방위 정책을 지향
- 상원은 계획된 개혁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
 - 신병 모집 정책, 전력획득비 감축, 전력 획득사업 축소 비용, 방산업계 구조 조정 충격 등

3-2-4. '2003-2008 군사 계획법'

- 1996년에 시작된 직업 군인제 달성을 위해 방위 노력의 상향과 군 장비 현대화를 지향 ☞ 2008년 병력 상한선을 446,600명으로 설정
- 상원은 계획된 개혁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
-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직업 군인 선호도를 높이고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직업 군인제 촉진 기금'을 설정.
- 국회 '국방 및 군사위원회'는 2003~2008년 LPM 집행을 엄중히 평가
 - 특히 대외 작전(OPEX)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 ☞ 냉전 종식 후 대외작전은 군 위상을 높이는 핵심 요인
 - 향후 군사 계획법 실행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할 것을 천명

3-2-5. '2009-2014 군사 계획법'

- 2008년 '국방안보백서'는¹⁷⁾ 2001년 9.11 테러 교훈을 바탕으로 작성
 - 국가 안보와 국방과의 경계가 없다는 교훈에 근거
 - 국방과 안보의 경계가 흐려짐을 강조
 - 그래서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위협과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전략을 정의
- 6년간 국방비 1,850억 유로를 책정하는 예산 우선순위 유지에도 불구하고
 - 국방부 산하 54,000개 직책(군인 직책 46,500개) 축소를 계획
 - 병력 감축으로 절감된 예산은 장비 획득, 특히 무기체계 획득에 재할당

3-2-6. '2014-2019 군사 계획법'

-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5월 당선 후,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인식, 국방과 국가 안보에 관한 새로운 백서의 초안 작성을 요구
- 2013년 4월 국방백서¹⁸⁾ 국방 우선순위 중 처음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사이버 방어의 확장을 강조
- 이는 2013년 12월 18일에 작성된 '2014-2019 군사 계획법'에 반영
- 공공 재정 적자 회복이 시급한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4-2019 군사 계획법'은 국방예산을 초기 3년 동안 당시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기간에는 국방백서에서 명시한 군 모델을 달성할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계획
- 2013년 이후 식별된 (국내외 테러 위협 증가 등) 전략·작전 환경의 악화를 반영하여 2015년에 '2014-2019 군사 계획법'을 수정하여 '2015-2019 군사 계획법'으로 개정

3-2-7. '2015-2019 군사 계획법'

- 이로 인해 '2015-2019 군사 계획법' 예산이 1,624억 유로로 증액
 - '2014-2019 군사 계획법'의 동 기간 할당된 예산보다 38억 유로 증가
 - 군 소유 부동산 및 장비 매각을 통해 소요 비용을 충당¹⁹⁾
- 기존 법에 의한 병력 감축 목표에서 18,500명을 하향하도록 결정

17) Livre blanc sur la défense et la sécurité nationale

18) le Livre blanc sur la défense et la sécurité nationale

19) 예산외 수입

- 2015년 1월 테러 이후에 프랑스군은 **국내 치안을 보장할 목적으로**
 - 국내에 **10,000명(이중 예비군 3,000명)**을 투입하여 테러 징후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계(Sentinel) 작전**’을 수행
 - 동시에 테러범들이 이라크 및 시리아에 기반을 둔 이슬람 세력의 일부라는 명분으로, **프랑스군의 이라크·시리아 내 대테러 군사 작전을 강화**하기로 결정

<그림 10. 프랑스 대테러 작전 예산>



3-2-8. '2019-2025 군사 계획법'

- 2017년 국방백서를 반영하여 제정
 - 국방부 장관 위임 민군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전략서 작성 위원회
 - 전략 환경의 "급작하고 지속적인 악화"와 새로운 전쟁 및 갈등 양상에 직면하여 유럽 대륙은 가까이 직접적 위기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의 위기에도 노출
 - "고도의 산업 기반과 국방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자율성"으로 대응.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구축을 위한 지지
- 방위비를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2%까지 상향할 것을 목표
 - 2022년까지는 매년 17억 유로, 2023년에는 30억 유로 증액
- 군 정원은 2025년까지 6,000명을 증원하여 275,000명을 달성 예정
 - 특히 사이버 방어 및 디지털화(1,500), 정보(1,500), 민감 지역 보안(750), 수출 지원(400) 분야의 정원 증원 계획

3-2-9. '2024-2030 군사 계획법'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시 경제' 필요성을 인지한 마크롱 대통령은 '22.6월에 기존 '군사 계획법'의 재검토를 요구
- 기존 법을 대체할 '2024-2030 군사 계획법' 초안이 '23.4월 제시되었고
- 佛 병기본부는 민간·기업의 물자를 징발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²⁰⁾

4. 예비전력 현황 및 동향 분석

4-1. 예비군 제도

프랑스 예비군은 '작전 예비군'과 '시민 예비군'으로 구분된다.

4-1-1 작전 예비군

작전 99,300명 규모로,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제1 예비군과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제2 예비군으로 구성된다.

- 제1 예비군
 - 군 복무 경험 없는 시민 중 예비군 복무 계약한 시민 총 39,300명
 - 이중 평균 1,800명(군경찰은 미포함)이 일상적으로 복무
- 제2 예비군
 - 군 경력자 중 전역 후 5년간 예비군 복무 계약(60,000명)

작전 예비군은 국가 동원령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예비군 체제 설치령이 발령 되었을 때 소집된다. 이 제도는 국토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때 군, 예비군, 민간 인까지 소집할 수 있게 한다. 소집이 필요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법령을 승인해야 한다. 작전예비군은 복무 중 일반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다.

4-1-2 시민 예비군

시민 예비군은 군 작전에 동원되지 않는 예비군으로 3,94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직장에서 국토방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필요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군에 제공하는 등 자발적으로 공익에 봉사하나 군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4-2. 프랑스 예비군 기원 및 폐지

프랑스에서는 예비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우선 징병제가 도입되었다. 징병제는 1798년에 처음으로 군대가 안정적으로 대규모 병력을 소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당시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징집은 외국의 침략 위협에 대응하고, 大軍을 형성하여 대외 전

20) <https://www.lefigaro.fr/flash-actu/ guerre-en-ukraine-macron-demande-une-re-evaluation-de-la-loi-de-programmation-militaire-20220613>

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나폴레옹이 집정정부²¹⁾ 통령이 된 후에 **첫 번째 예비군 조직이 창설된 바 있고**, 그 이후에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방위군이 수차례 내부 치안을 제공하였다**. 이후 전쟁이 없어 예비군은 필요없게 되었고, 1818년과 1832년에 제정된 법에 의해 **제비뽑기에 의한 소집으로 자발적 지원자의 부족을 보충하였다**²²⁾

4-3. 프로이센 예비군 역사

프랑스가 실질적 예비군 제도를 소홀히 한 반면, **프로이센 왕국은 1860년부터 매우 효과적인 예비군 제도를 정착시켰다**. 프로이센군은 병과에 따라 2~3년의 군복무를 마친 후, 32세까지 영토 방위군(Landwehr)에 투입되며, 영토 방위와 치안을 위해 **50세까지 동원 대기 태세를 유지하였다**.

4-4. 프랑스 예비군 제도 재도입

프랑스는 프로이센 사례(1862년 2월 4일의 날법)에서 영감을 받아, 효과적 예비군 제도를 수립하려는 입법적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역군을 증강할 기동 방위군 훈련이 무시되었고 예비대는 충분히 미편성되었으며, 훈련이나 지휘도 제대로 되지 않아, 1870년 보불전쟁 시 독일의 침공을 저지하지 못하고, 파리를 함락당해, 황제(나폴레옹3세)는 포로로 전락하였다**.

결국 프랑스는 보불전쟁 패배의 굴욕을 경험한 후, 당시 제2제정이 붕괴한 후 예나, 1872년에 제대로 된 예비군 설치법을 제정하였고, 냉전 종식 후, 국가 복무가 종식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 법은 모든 프랑스 남성이 **현역으로 5년간 복무한 이후에, 20세에서 40세까지 4년간 현역군 예비대에, 5년간 지역방어 부대에, 이후 6년간 지역방어 부대의 예비대에 소집될 수 있도록 예비군 복무를 의무화 하였다**. 대규모 외부 세력에 의해 국경을 침해당할 수 있는 위협에 처한 국가에 필요한 제대로 된 예비군 제도였다.

육, 해, 공군, 헌병 각 군은 예비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였다. 예비군의 주요 목표는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었다. 각 군은, 국경 수비 혹은 2선 부대 훈련을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 이런 대규모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서유럽에서 프랑스의 인구학적 우세가, 주변 국가보다 출산율이 더 많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1871년 독일 통일로 인해 상실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전투력의 양적 우세는 승리를 위한 주요 변수로 간주 되었고, 상대

21) 나폴레옹의 쿠데타에 의해 1799년 11월 9일~1804년간 존속, 나폴레옹이 황제에 오르면서 폐지.

22) 나폴레옹의 침략전쟁으로 영토가 확장되면서 징집대상이 증가하여 예비군 필요성 감소.

의 양적 우세에 대응해야 하는 위기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었다.

1889년 7월 15일자 법률은 **군 복무 의무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였고, 1905년 3월 21일 법은 평등 차원에서 **모든 군 복무 면제 조건을 배제**하면서, **현역군 복무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였다. 1913년 8월 7일의 법은 **모든 병역 의무를 28년으로 연장**하였고, 1923년 4월 1일 법률은 **현역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고 예비군 체계를 다음과 같이 다소 수정하였다.

- "현역군 예비대"라는 용어를 "가용성"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 "지역 방어군" 용어를 폐지하고
- 40세 미만의 예비군을 '제1 예비군'으로,
- 그 외 예비군을 '제2 예비군'으로 대체

1971년 6월 10일 법률(국가복무법) n° 71-424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 국가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
- '가용성'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 제1 및 제2 예비군을 통합하여 35세 이하 모든 프랑스 남성을 대상

이 법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연령 제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①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의 경우, "육군의 필요를 고려하여" **현역 간부 연령 정년의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② 동일한 조건으로 예비대에 배치된 현역 장교 및 부사관
- ③ 지원 부대 및 부서 근무자는 각 법령이 정한 연령 정년

또한 국가 복무법은 예비군의 의무와 활동 횟수를 규정하였다. 특히 L. 82조는 가용자와 예비군은 "총동원, 부분 동원, 개별 소집, 혹은 기간 소집의 경우 훈련이나 직책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소집되면 현역군으로 간주되며 군법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자녀가 4명 이상인 남성은 소집에서 제외시켰고, 예비군은 현역 당시 복무한 부대로 소집되었다.**

가용자와 예비군은 양성교육을 받기 위한 훈련 기간 또는 군대에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에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기간은 **각각 1개월 또는 연간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예비군 간부는 연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추가 소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집된 가용자나 예비군은, 불가항력적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할 수 없고, 반드시 요구된 시기에 응소해야 한다.

동일한 규정의 L. 84조는, 1993년 1월 4일에 수정되어, 가용자나 예비군이 "양성교육을 받거나 완료" 혹은 "군에서 직책을 수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5. 프랑스 예비군 제도 역사적 특징(공통점)

예비군의 복무 방식과 기간이 시대에 따라 변화 되었지만 1872년 최초부터 국가 복무가 중단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통점(연속성)이 존재한다.

- 각 군이 독자적으로 자체 자원을 관리 하는 것
- 군에 요구되는 특정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자발적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4-6. 냉전 종식 후 예비군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냉전 종식 이후에 프랑스 국경을 침범하는 대규모 공격 위협이 제거되었다는 전제하에 프랑스는 다음과 같이 예비군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 관리하기 어려워진 지나친 규모의 예비군 제도의 개선 필요
- 프랑스 예비군 규모는 1993년 약 50만 명 → 현역군 규모와 대등
 - 당시 의무 군 복무를 종료한 후 35세까지 자동적 예비군에 가입하여 총동원 혹은 부분 동원의 대상이 되었다.
 - 이 규모 예비군 유지 위해 과도한 예산과 인프라 소요

4-7. 1993년에 도입된 "Reserves 2000" 개혁

냉전 종식 이후에 프랑스는 기존 예비군 제도를 '2000년대 예비군 제도'라는 명칭으로 현저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우선 전역 장병 중에서 예비군 가입을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 '예비군 복무 특약'을 체결하여 작고 선별된 조직으로 발전시켰다.²³⁾

자발적 지원자로 예비군 총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새로운 예비군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다. 새로운 제도는 1999년 10월 22일 제정된 **예비군 및 방위군 조직에 관한 법률** 제99-894호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2006년 4월 18일 제정된 법률 제2006-449호로 개정된 후, **국방법에 통합**되었다.

4-8. 국방법 예비군 제도(le code de la défense, partie IV, livre II)

4-8-1 작전예비군

작전 예비군은 각 군 및 지원부대(부서)로 소집된다. 별도의 예비군 부대(부서)는 없다. 적절한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현역과 동일한 직책에 보직된다. **작전예비군 지원자는 병, 부사관, 장교가 되기 위한 '군사 준비'**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진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료하면 임용될 수 있다.²⁴⁾

23) 계약 예비군(ESR: un engagement spécial pour servir dans la réserve)

각 군과 지원부대(부서)는 각각 작전상 필요에 의한 예비군 훈련 과정을 정의한다. 특수 전문 직종 인력도 예비군에 지원 가능하다. 이들은 특정 군사 훈련 없이 민간 전문 자격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소집되며, 소집 즉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직책에 따른 계급을 부여받는다. 예비군 계약이 종료된 자는 예비군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작전 예비군 희망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 동안 작전 예비군 지위 유지를 신청할 수 있고,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작전 예비군은 부여받은 직책에 따라 최대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 양성 교육 또는 부대 훈련에 참여하거나, 현역 직책을 일시적으로 보충하는 경우는 연간 30일
- 입대 희망자의 준비 과정을 지도하거나 청소년 일일 안보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는 연간 60일
- 해외 파병 등 현역 군부대의 작전 임무에 보직되는 경우 연간 120일

예비군이 직장 근무 중 작전 예비군으로서 복무를 계획할 때 다음 두 가지 절차에 따라 고용주와 협의한다.

- 연 5일 이하의 복무를 계획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복무 1달 전에 요청하며,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연 6일 이상의 복무를 계획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복무 2달 전에 요청하고, 고용주가 승인하면 복무할 수 있다.

각 예비군은 군 채용 담당 부서와 매년 복무 희망 기간을 협의하여 계획한다.

4-8-2 시민 예비군

시민 예비군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국가 복무 정지를 고려하여 예비군 제도를 개선하는 1999년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 2013년 10월 4일 지침 9924호 및 2014년 3월 14일 지침 2391호는 시민 예비군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시민 예비군은 군에 필요한 능력이나 경험을 갖춘 자 혹은 국방에 관심이 많은 자 중 군이 승인한 자원자로 구성된다.(국방법 L. 4241-2조). 시민 예비군에 가입하면 부대와 약정을 맺고, 명예 계급을 부여받고, 임무에 관한 서한을 수령한다. 시민 예비군의 주요 임무는 그들의 사회적 및 직업적 환경에서 국방 정신을 전파하고, 사이버 방어와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제대 군인을

24) 작전예비군 가입 조건(국방법 L. 4211-4조).

위해 자발적으로 전직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시민 예비군은 급여나 수당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공익에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므로, 필요시 공익 근무자의 신분을 가질 수 있으며, **출장 경비를 수령할 수 있다.**²⁵⁾ 시민 예비군은 **소속 직장에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으며, 자유 시간에 국방 관련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4-9. 국가 예비군의 날(JNR: la Journée Nationale du Réserviste)

국방법 제L 4211-8조는 **연 1회 국가 예비군 기념일 행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날은 **예비역으로 복무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국토방위에 삶의 일부를 헌신하기로 선택한 시민들을 축하하며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며, **전 국민에게 군을 홍보하고, 애국심과 호국사상을 고취하며, 모병의 날로 활용하기도 한다.** 전국의 현역, 예비군, 청년, 교사, 지자체 및 방위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4-10. 예비군 최고 위원회(CSRM: Conseil supérieur de la réserve militaire)

프랑스는 작전 예비군 및 시민 예비군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7년에 예비군 최고 위원회(CSRM)를 창설하였다. 예비군 제도에 대한 성찰, 협의, 제안 기관으로서 예비군의 역할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4-11. 예비군 가입 조건(국방법 제L. 4211-2조)

-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 외인부대 복무 후 전역한 자
- 17세 이상
- 국가 복무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공민권 상실되지 않은 자, 공직 임용 금지 처분을 받지 않은 자, 형사 처벌 받지 않은 자, 군형법 L. 311-3부터 L. 311-9까지의 조항에 의거 파면이나 강등 선고를 받지 않은 자**

4-12. ‘국방 및 시민의 날(JDC: journée défense et citoyenneté)’²⁶⁾

프랑스는 **청소년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프랑스 국가 기관의 기능을 소개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국방 및 시민의 날’**이라는 홍보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이날은 **성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국방의 사명과 역할을 소개한다.**

프랑스 청소년 중 **16세에 인구 조사 절차를 마친 청소년들은, 인구 조사일**

25) 국방법 L. 4211-6조

26) <https://droit-finances.commentcamarche.com/famille/guide-famille/69-le-derolement-de-la-journee-defense-et-citoyennete-jdc/> 검색일 2023.5.15.

과 18세가 되는 날 사이에, "소환의 날"이라고도 하는 '국방 및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수령한다. 이 소환장은 행사 45일 전에 발송된다.

지정된 일자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소환장 수령 후 15일 이내에 국가 기관에 연락하여 다른 날짜를 요청할 수 있다. 소환장에는 행사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며, 주로 군부대 혹은 최기 행정기관에서 개최된다. 소환장은 행사에 대한 실용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참석자는 여행 바우처 또는 10유로의 고정 여행 수당(2020년 7월 21일 법령으로 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행사는 그 이전의 '국방 준비 소집일 (JAPD : journée d'appel de préparation à la défense)'을 대체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행사가 진행된다.

'국방 및 시민의 날' 행사 진행

- 아침 식사(크로아상, 커피 등)와 함께 주최측의 환영
- 시민의 책임과 국방 문제에 대한 홍보에 이어 프랑스어 시험
- 정오에 무료 점심 제공
- 입문식 후에 응급 처치 실습을 하거나 군사 시설을 방문

행사 참석자에게는 참석자가 행사를 성실히 참여했음을 인정하는 행사 참석 증명서를 제공한다. 참석자에게 인증서 원본 1부만 제공한다. 모든 청소년은 25세 이전까지 학력고사,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국가 고시에 응시할 때 동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은 만 25세가 될 때까지 동 인증서를 소중히 보관한다.

이와같이 프랑스는 '국방 및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 성인이 될 모든 청소년에게 권위있고, 친절하게 국가 기능과 호국 사상을 고취하며 애국심을 조성한다. 모든 프랑스 청소년은 이 행사의 참석을 필수적이고 소중한 이벤트로 간주하며, (경제, 문화 등 모든 가치 이전에) 국가, 군대, 시민의 의무를 가슴에 새긴다.

4-13. 프랑스 징발 제도²⁷⁾

프랑스의 징발 관련 최초 법규는 '1877년 7월 3일 군사적 징발법'으로, 전시에 군사적 필요에 의해 동산(Movable Property)을 징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었다. 1938년 7월 11일의 전시 국가 조직에 관한 법률과 1959년 1월 6일의 자산 및 용역 징발에 관한 조례가 결합되어 민사적 성격을 띠게 되었

27) La réquisi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I / II) - Bienvenue sur le site du Journal du Droit Administratif ! (journal-du-droit-administratif.fr) 검색일 2023.5.15

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징발할 수 있다.

상기 군사적 및 민사적 절차가 국방법에 결합되어 징발에 대한 종합법으로 형성되었다.²⁸⁾

5. 결 론

프랑스는 역사적 전통적으로 오늘날까지 강대국이지만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전쟁의 승패에 의한 영욕을 크게 경험하였다. 기원전 1세기에는 시저에 의해 점령당해 5세기 동안 로마의 통치를 받았다. 이후 바이킹의 공격을 받았고, 영국이 노르망디 등 일부 지역을 수 세기 동안 점령하는 침탈을 겪었다. 프랑스 군사영웅 잔다르크와 국민의 침략군에 대한 저항의 정신이 이때 나타났다.

샤를만뉴 대제와 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한 군주가 즉위했을 때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확장된 이슬람 세력의 침략을 프랑스 국경지역에서 억제할 수 있었고,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절대 왕정의 최정점에 도달했던 17세기 루이14세 통치 기간에는 프랑스가 유럽의 최강국의 지위를 누렸다. 이때 루이 14세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머물게 하고, 부상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파리 중심에 앵발리드(Invalide) 시설을 설치하였다.

앵발리드는 파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권위있는 건물 중 하나이며, 프랑스 최고의 영웅 나폴레옹이 그의 장군들과 함께 안장된 곳이기도 하다. 1차 세계 대전의 영웅 포쉬 원수와 프랑스의 명망있는 장군들도 이곳 성당의 지하에 안장되어있다. 보훈이 곧 부강한 국가의 기초라는 국민적 신념이 형성되었다. 프랑스의 영광은 나폴레옹 시절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국가 동원제도를 무시한 결과, 1870년 프러시아 제국에 패배하여 파리를 점령당하고 황제가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겪고 엄청난 성찰과 반성 끝에 다시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토 수호를 위한 국민의 결의를 표현하기 위해 국민 모금으로 몽마르트 언덕에 성심성당을 세웠다.

강력한 예비군 제도와 국방을 토대로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과 함께 독일의 침공을 잘 저지하였다. 프랑스의 포쉬 원수가 연합군 총사령관이 되었고, 콩삐엔느 숲의 열차 속에서 독일의 재기를 저지할, 독일에게는 대단히 굴욕적인, 베르사유 조약을 부과하였다. 이후 설치된 국제연맹에서 불어가 공식어로 채택되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까지 프랑스가 국제 정치외교의 중심국이 되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군에게 프랑스 전선을 돌파당하자, 프랑스는, 엄청난 규모의 전투력을 독일군 격파에 사용하지 않고, 바로 항복하였다. 덩케

28) Code de la défense - TITRE II : RÉQUISITIONS MILITAIRES (codes-et-lois.fr) 검색일 2023.5.15

르크에 고립된 연합군 수십만 명의 생명과 전투장비가 위태롭게 되었다. 연합군의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발생한 해변에 프랑스군은 없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군의 희생이 컸다. 8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미국 및 영연방 공화국 군인들은 이 사실을 회상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는 전승국 대열에 섰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으나, 유엔의 실무언어는 영어가 되었다. 미국의 유럽 재건 계획에 의해 프랑스는 신속히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1954년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패하고, 130년간 점령했던 알제리에서도 저항세력에 밀려 독립을 허용하면서, 프랑스군은 더 이상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독자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1956년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에 항의하며 영국,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침공하여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였지만 미국의 요구와 소련의 협박에 의해 물러서고 말았다. 프랑스는 더 이상 국제무대에서 군사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닌 것이 입증되었다.

이제 프랑스가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를 바탕으로 외부 세력의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며, 침략 당할 경우에 국경에서 강력한 군대로 저항하고, 강력한 예비군으로 전선을 보강하고, 그래도 국토를 점령당할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때 독일에게 즉각 항복했을 때와는 달리, 방위군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국민에 의한 철저한 저항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1972년 프랑스 최초의 국방백서에서 제시된 프랑스의 국방정책의 근간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한 국가 경제력이 지속되지 못하면 강력한 국방력의 구축은 허상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국제 경제력 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다.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프랑스 경제력에 의해 프랑스 국방력도 예비전력 수준도 너무 높게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2023년 기준, 국경을 직접 침범당할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토 동맹의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현존 전투력 273,000명 예비전력 99,3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예비전력은, 현역 군부대보다 열등한 조직이 아니라, 필요시 소집되어 현역군 부대에서 현역과 동일하게 편성되는 현역 전력이 된다. 그래서 예비 전력 유지관리 예산이 변수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예비역 및 추모 관련 예산은 국방비와 별도의 예산이며, 군인 연금도 국방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비군은 동원되면 곧 현역이 되기 때문에, 예비군 지원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역에 대한 사기와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그래서 2022년 국방백서를 새로 발간하고, 긴급 ‘군사 계획법(2024-2030)’을 준비하면서 2023년 국방예산에 현역 군의 복지 및 사기 양양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프랑스에서 예비군은

곧 현역이다. 예비군을 위한 별도의 복지는 필요 없다.

프랑스군은 군경찰, 공병대, 방위군이 평소 국민의 일상 속에서 국민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에게 군대는 멀리 있거나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군대가 강했을 때 국가가 부강했고 국민이 풍요로웠던 역사와 그렇지 못했던 역사를 왜곡없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내가 성인이 되면 국가, 군, 나의 의무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있는 중요한 나의 사명 국민 모두의 사명이 되는 것이며 이를 기꺼이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하면 프랑스 국민은 국가를 위해 단결하고, 군대를 지원하고, 또 군대나 방위군에 자원하여 외부의 침략과 침탈에 철저하게 저항할 의지를 평소부터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지며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이러한 프랑스의 지혜와 제도를 배워야 할 것이다. 끝.

| 저자소개 |



박한빈 | 국방외교협회 선임분석관

육사 38기로 임관하여 현역 때는 주프랑스 국방무관, 국방정보본부 해외종합분석과장, 미 육군 정보센터 교환교관, 캐나다 피어슨 국제 평화유지센터 교환교수, 국방부 정책기획국 군사외교정책 담당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 전역 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개념연구 센터 및 소요기획실에서 6년간 미래 전장환경 분석, 미래 과학기술 발전추세 분석, 미래 합동작전개념 연구, 기술정보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박사 학위 논문은 “하이브리드전 양상과 대응전략 연구: 러시아·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 분석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였다. 그 외 학술 활동으로는 ‘우주 위협 분석’, ‘미래 전구 지속 감시 개념’, ‘미래 한국형 초소형 위성군 운용 개념’, ‘미래 정보 융합 체계’, ‘미 육군 정보 융합 및 전장 가시화’, ‘아나콘다 작전 교훈’, ‘미 전투훈련장 운용 실태 분석’, ‘미 육군 디지털화 과정 소개’ 등이 있다.